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분야별책임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 joun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연원호 경제안보TF위원장 (대러 제재,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강구상 미주팀장 (미국,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조동희 유럽팀장 (유럽, 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이승신 중국경제실장 (중국, sslee@kiep.go.kr, Tel: 044-414-1235)

김규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일본,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경제/거시금융,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배찬권 무역통상실장 (교역/투자, ckbae@kiep.go.kr, Tel: 044-414-1208)

차 례

1.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과 전망 시나리오
2.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내용
3.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4. 국제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6. 한국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내용

- ▶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 영토 주권 문제)가 존재하므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 [주요국의 대러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음.
 - [수출통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MFN]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MFN 지위 취소의 통상법적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됨.
 - [금융제재]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함.
 - [한국의 동참] 우리 정부도 3월 2일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3월 13일부로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 내용(계속)

-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영향]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강도의 자본 통제를 통해 △환율 방어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투자 위축으로 실질 GDP가 8~10% 하락할 가능성이 대두됨.
 - [맞제재]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와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맞대응 중이며, 향후 대상국이 확대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디폴트 우려]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자산 동결 △달러 등 외화 거래 제한 등의 금융제재로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및 기업의 금융 경색이 심화되어 대외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국내대책] 금융경색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타기팅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VIX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 1개월(1.24~2.23) 평균 26.2를 기록하였으며, 발발 이후(2.24~3.14)에는 31.6으로 상승함.
 -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전이 등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국제금융결제망의 대안 등장 등 세계무역환경과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 [주요국] 교역을 통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와 에너지 및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미국] 낮은 대러 의존도(수출 0.36%, 수입 1.05%)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러시아 진출 미국기업의 단기매출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국제유가 급등 부담이 커짐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 협상도 검토하고 있음.
 - [EU] 대러 에너지 의존(원유 26.9%, 석탄 46.7%, 천연가스 41.1%)을 제한적으로나마 낮추려 하는 가운데 친원전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예상됨.
 - [중국]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이나 여러 측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은 작으나 일부 원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관련 산업의 공급망 문제, 대러시아 제재의 중국 확산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임.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SWIFT 배제로 인한 영향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로 대체하여 최소화할 계획이나 CIPS 독자거래가 가능한 직접참여자 비중이 6% 정도로 낮아 SWIFT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계속)

- [일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주가하락 및 엔화 평가절상 등으로 실질 GDP가 1.1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일본은 쿼드(QUAD) 4국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유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 [한국의 거시금융]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불확실성] 실증분석 결과, 월평균 VIX 지수가 5 증가하는 금융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0.35%, 2021년 GDP 기준 7조 원 추정), 명목통화 가치 하락(▼0.15%), 주가지수 하락(▼0.35%)을 가져오며, 산업생산지수가 3개월 후 최대 0.1%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유가상승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석기간이 불안정기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 성장] OECD산업생산이 1% 감소하는 세계경제 둔화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0.06%), 산업생산을 하락(▼0.11%)시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국내 금리상승의 위험요인이 있음.
- ▶ [한국의 교역 및 투자]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p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 영향]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 수준, 한국의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2020년 기준 0.57%로 낮으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가 대세계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됨.
 - [장기적 영향] 대러 제재가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러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변화는 한국 -0.06%p, 러시아 -6.19%p, 미국 -0.02%p, EU -0.08%p, 일본 -0.06%p, 중국 -0.07%p로 나타남(중국의 대러 제재 불참 시 한국 -0.01%p, 러시아 -1.66%p, 미국 -0.01%p, EU -0.03%p, 일본 -0.01%p, 중국 0.02%p).

1.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과 전망 시나리오

■ **[전쟁의 발생 배경]** 전쟁 발발의 표면적인 동인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이며,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임.

-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NATO 가입 천명과 미국 지도부의 NATO 문호 개방 약속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한 반발과 불만을 표출하였음.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의(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이탈 방지를 자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함.
- 미국은 대서양 동맹 복원 및 강화,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 **[전쟁의 개시 목표]**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정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함.

- 2022년 2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2개 친러 공화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파병을 지시한 대통령령에 서명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된 목표는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신속한 점령을 통해 젤렌스키 정부 제거와 친러 정부 수립임.

■ **[전쟁의 전개와 서방의 대러 제재]** 러시아의 ‘속전속결’ 전쟁 수행전략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의도와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서방은 강력한 대러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수도 함락이 예상보다 크게 지체되자,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층 높여나가고 있음.

-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서방세계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자중하라고 서방 측에 경고를 보내고 있음.
- 미국 주도의 서방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도 제재 참여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종전 및 휴전 협상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째 지속되는 현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미 4차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임.

- [협상 진행 및 타결 조건] 러시아는 협상 진행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함과 동시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 영토 주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의 타결에는 양국 대표단의 이해관계 조율 및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협상타결과 종전까지는 [표 1-1]에 제시된 현재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유지

- [협상 교착시 러시아의 군사적 점령 시나리오] 러시아가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하면서 젤렌스키 정부를 굴복시키는 시나리오임.
 - 푸틴 대통령이 전쟁 개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 및 탈나치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점령 이후 관리 비용 문제(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강력한 독립운동 및 게릴라전 수행 가능성)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방안임.
 - *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현재의 대러 경제제재와 추가적 제재(SWIFT 전면 차단, 러시아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 등) 조치가 단행될 전망
- [전쟁 장기화시 러시아의 내부 갈등 심화에 따른 철군 시나리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 부과와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반전 시위 및 반정부 운동의 점진적 확대 등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 현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게 되는 시나리오임.
 -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현재 여건상(정부 지지 세력 견제, 야당 지도자 부재, 친정부 여론 조성 환경 등) 단기적 차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전쟁 반대 여론의 존재와 경제제재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현실화 여부를 배제할 수 없음.
 - * 이 경우에도 현재의 대러 경제제재와 추가적 제재(SWIFT 전면 차단, 러시아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한 금수조치 등)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

표 1-1.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과정과 주요 대러 제재 현황

2월 21일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DPR 및 LPR)의 독립 승인을 통해 민스크 협정 파기 공식화	
2월 22일	러시아 상원, 푸틴 대통령의 해외 무력사용 권한 승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러 외무장관 회담(2월 24일 예정) 취소	
	1단계 대러 경제제재 발표	미국, △러시아 기업·금융기관 44개(러시아 수출입은행,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 등) 및 러시아 선박 5개 등을 SDN 목록에 추가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 제한(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
		영국, 러시아 은행(방크 로시야, 흑해은행 등 5개) 제재
	독일,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 사업 승인 절차 중단	
2월 24일~	푸틴 대통령,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개시 선언(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 러-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진행 중: 1차(2월 28일), 2차(3월 3일), 3차(3월 7일), 4차(3월 14일)	
2월 24~25일	포괄적 대러 경제제재 발표	미국, △러시아 대형 은행(스베르뱅크, VTB) 포함 90여 개 기업·금융기관 제재(제재 대상별 자산동결,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 제재, 신규차입·투자 금지 등 적용) △대러 EAR 수출통제(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제품부품, 서비스 등/ 러시아 해외직접제 품규칙(FDPR) 적용) 등 발표
		EU, 광범위한 금융제재 외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제한(반도체 및 최첨단 기술 포함) △정유 및 우주·항공 부문 수출 제한 등 발표
2월 26일	경제제재 발표	미국/EU/영국/캐나다/일본,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등 합의 * [3월 2일] EU, 러시아 7개 은행(방크 오토크리티예, 소브콤뱅크, 노비콤뱅크, 프롬스바즈뱅크, 방크 로시야, 대외경제은행(VEB), VTB)의 SWIFT 배제(스베르뱅크, 가즈프롬뱅크 제외) 및 러시아직접투자자금(RDIF)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발표

2월 28일~ 3월 2일	미국/EU/영국/캐나다, 역내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이착륙 및 비행 금지
3월 1~7일	한국, △러시아 은행(스베르뱅크, 대외경제은행(VEB), VTB 등)과의 거래 및 국제 거래 중단(중앙은행, 국부펀드)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EU가 발표한 7개 은행 대상) 발표
3월 8~11일	미국, △러시아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 금지 △러시아 최혜국 대우(MFN) 중단 결정
3월 9~15일	EU, △러시아 에너지 부문 신규투자 금지 및 관련 장비·기술·서비스 수출 제한(민간 원자력 제외/ 석유, 가스 등의 EU로의 반출은 허용) △철강제품 수입 및 사치품(고가의 자동차, 보석 등) 수출 금지 △러시아 최혜국 대우(MFN) 중단 등 발표

자료: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1-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의 주요 대응조치

3월 7일 (외국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임시절차령 및 외국채권자 특정을 위한 비우호국가 리스트 공포)	- [비우호국가 리스트]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연방, 러시아 기업 및 러시아인에 대해 비우호 행위를 한 국가 선정 ○ [총 48개국] 미국, EU(27개국),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 [채무이행임시절차령] 채무자(러시아 연방,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러시아 거주자)와 비우호국가 채권자 간의 금전채무(대출, 소비대차, 금융상품 채무) 규제 ○ 채무자가 채무 외화 종류에 관계없이 비우호국가 채권자의 외환 채권을 지급할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고시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월 1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채무)
3월 9일 (러시아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리스트 발표)	- [수출금지]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제외 모든 국가로 수출 금지(2022년 말까지): 기존 수입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 금지 목적 ○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반도체소자, 전자 IC 등) - [수출제한]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로 수출 제한(2022년 말까지) ○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 ※ [공통 예외]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등

자료: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3.2022 N 95 "О временном порядке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некоторыми и иностранными кредиторами";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5.03.2022 N 430-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территорий, совершающих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3.2022 N 100 "О применении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сфер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2022. 3. 1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러시아 수출규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2022. 3.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내용

가. 수출통제(FDPR)

1) 미국 수출통제제도 및 FDPR

- [미국 수출통제제도] 국가안보 수호 및 외교정책 추진 수단으로서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및 방위 관련 품목(defense-related items)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표 2-1 참고)

표 2-1.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방위 관련 품목 수출통제
관할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
법적 근거	수출관리법(EAA): 2018년 8월 수출통제개혁법(ECRA)으로 대체	무기수출통제법(AECA)
규정 (regulation)	수출관리규정(EA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웹사이트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에서 관할하고 있고 1979년에 제정된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미국 의회는 해당 법을 폐지하고 이를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으로 대체
 - 수출통제개혁법에 근거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는 다음과 같음.
 - ① CCL 규제: 컴퓨터, 비행기 등 평시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나 전시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로, 수출통제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에 등재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허가(license) 필요
 - ② EAR99 규제: CCL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비첨단기술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로, 특정 국가가 미국의 수출금지 또는 경제제재 대상 국가이거나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가 수출금지 대상인 경우 사전허가 필수
 - ③ 군사최종사용(MEU: Military End Use) 규제: 최종적으로 군사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로, 중국에서의 군사최종사용(자)에 대한 개념 명시
 - ④ 상황허가 규제(Catch-all Controls): CCL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첨단 이중용도 품목(low-level dual-use items)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제도
 - ⑤ 엔티티 리스트(EL: Entity List) 규제: 소위 블랙리스트 규제로 알려져 있으며, EL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수출허가가 불필요한 품목이더라도 사전허가 필요

■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Foreign-Direct Product Rule)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Part 734.9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4가지 FDPR 유형(국가안보, 9x515,¹⁾ 600시리즈,²⁾ EL³⁾)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EAR에 의거하여 수출통제 적용
 - 해외생산 제품이 미국의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되었거나 수출통제목록(CCL) 내 특정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에 해당되는 제품인 경우
 - 해외생산 제품의 종착지가 EAR Part 740의 추록(supplement) 1에서 지정한 국가 그룹에 속하거나, 해외생산 제품 거래자가 EAR Part 740의 추록(supplement) 4에서 지정한 엔티티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표 2-2. FDPR 유형

FDPR 유형	적용 기준	적용 국가 그룹 또는 대상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수출통제목록(CCL) 내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통해 지정되어 국가안보통제 를 받는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생산된 해외생산 제품	D:1, E:1 또는 E:2
9x515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9D515(우주선 개조 및 관련 상품의 개발, 생산, 운영, 설치, 유지 보수, 수리, 검사 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또는 9E515(우주선 개조 및 관련 상품의 개발, 생산, 운영, 설치, 유지 보수, 수리, 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생산된 해외생산 제품	D:5, E:1 또는 E:2
600 시리즈 (600 Series)	수출통제목록(CCL) 내 군수품 항목에 해당되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지칭하는 600 시리즈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생산된 해외생산 제품	D:1, D:3, D:4, D5, E:1 또는 E:2
엔티티 리스트 (Entity List)	수출통제목록(CCL) 유형 번호 3(전자), 4(컴퓨터), 5(통신 및 정보보안)에 해당하는 총 16가지 기술 및 소프트웨어(3D001, 3D991, 3E001, 3E002, 3E003, 3E991, 4D001, 4D993, 4D994, 4E001, 4E992, 4E993, 5D001, 5D991, 5E001, 또는 5E991)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생산된 해외생산 제품	1) 엔티티 리스트 대상이 생산·개발하는 부품(part)·구성품(component), 또는 엔티티 리스트 대상이 생산·구매·주문한 장비(equipment)에 해외생산 제품이 사용되거나 포함될 경우 2) 해외생산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엔티티 리스트 대상이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예: 엔티티 리스트 대상이 구매자(purchaser), 중간 수취인(intermediate consignee),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 최종 사용자(end-user)인 경우 허가 필요)

주: 적용 국가 그룹은 다음 사이트 참고(<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2255-supplement-no-1-to-part-740-country-groups-1/file>).

자료: 미국 산업안보국(BIS), "Part 734 - Scope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82-part-734-scope-of-the-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1/file>.

1) 우주선 관련.

2) 국제무기거래규제(ITAR)가 관장하던 군수품.

3) 화웨이 관련 반도체.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위해 상기 4가지 FDPR 유형에 2가지 유형(Russia FDPR, Russia-Military End User FDPR)을 추가하였음(22. 2. 24).
- o [Russia FDPR] △해외생산 제품이 CCL 유형 번호 3~9(표 2-3 참고)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었거나 △해외생산 제품이 CCL 유형 번호 3~9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부품, 구성품, 또는 장비에 의해 생산 또는 개발된 경우 수출통제가 적용됨.
 - * CCL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소비재를 포함하는 EAR99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CCL 유형 3~9에 속하더라도 EAR에서 규정한 다음의 품목은 Russia FDPR 적용 예외: TMP, GOV, TSU (Technology and Software Unrestricted), BAG, AVS, ENC, CCD(Consumer Communication Devices: 핸드폰, 컴퓨터, TV 등)

표 2-3. 수출통제목록(CCL) 분류

CCL 유형 번호	범주 (Category)	상품 그룹 (Product Groups)
0	핵물질, 핵시설, 핵장비	A. 시스템, 설비, 부품 B. 시험, 검사, 생산장비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1	공업원료, 화학물질, 미생물 및 독소	"
2	소재공정	"
3	전자	"
4	컴퓨터	"
5	통신 및 정보보안	"
6	센서 및 레이저	"
7	내비게이션 및 항공전자기기	"
8	해양	"
9	추진시스템, 우주선 및 관련장비	"

자료: 미국 산업안보국(BIS), "Part 738 - Commerce Control List Overview and the Country Chart,"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2254-part-738-commerce-control-list-overview-and-the-country-chart-1/file>.

- o [Russia-Military End User FDPR] △해외생산 제품이 CCL 유형 번호 0~9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었거나 △해외생산제품이 CCL 유형 번호 0~9에 속한 미국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부품, 구성품, 또는 장비에 의해 생산 또는 개발된 경우 수출통제가 적용됨 (적용 대상: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Entity List에 추가된 49개 군사 관련 기업).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FDPR: 현황과 전망

- 미국은 대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 항공 등 수출통제목록의 유형 번호 3~9에 해당하는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사태 추이에 따라 규제 대상 확대 및 규제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
- [수출 규제 현황] 2월 24일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수출통제

목록(CCL, commercial control list)의 유형 번호 3~9에 해당하는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ECCN)를 대러시아 FDPR 대상으로 추가함.

- **[수출 승인 면제 조항]** 2020~21년 (社)화웨이에 적용했던 FDPR과 이번 대러 FDPR의 차이점은 자발적 제재 동참국(partner)에 미 상무부의 사전 수출 승인을 면제(licensing exemption)하는 조항이 생겼다는 사실임.
 - 3월 16일 현재 독자적 수출제재 조치를 취한 EU 회원국(27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33개 제재 동참국은 자체 수출 통제(미 상무부의 사전 수출 승인 불필요)
 - * 이들 국가는 Russia FDPR과 Russia MEU FDPR의 예외를 인정받아 러시아 수출 시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 그러나 면제 조건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수출통제와 유사한 품목 및 강도로 수출통제 예상
- **[향후 전망]** (社)화웨이에 적용했던 FDPR과 마찬가지로 사태 추이에 따라 규제 대상 확대 및 규제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CCL의 카테고리 적용 확대 △최종 소비재를 포함하는 수출행정규제(EAR99) 발동 가능성 등 규제 대상 확대 및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한 규제 강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나. WTO 최혜국대우(MFN) 지위 취소 결정

- **[미국]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서 2022년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 및 EU와 함께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MFN 지위* 취소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는 현재 러시아의 대미국 무역관계 지위 강등을 공식화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임.
 - * MFN은 WTO 회원국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WTO의 핵심 원칙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라는 표현을 사용
 - 미 하원은 2022년 3월 8일에 'USTR이 러시아의 WTO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⁴⁾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도 3월 2일과 8일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MFN 지위를 취소하고 러시아의 WTO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USTR이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⁵⁾이 제출됨.
 - 과거 미국은 냉전 시절 GATT 1947 체제하에서 20여 개 국가의 MFN 지위를 취소한 바 있음. 다만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후 MFN 지위를 회복함.

4) H.R.6968 - Suspending Energy Imports from Russia Act - 117th Congress (2021-2022).

5) S.3717 - A bill to withdraw normal trade relations treatment from, and apply certain provisions of title IV of the Trade Act of 1974 to, produ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for other purposes - 117th Congress (2021-2022); S.3786 - A bill to suspend normal trade relations treatment for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Belarus, and for other purposes - 117th Congress (2021-2022).

■ MFN 지위 취소 이후 미 관세율표(HTSUS)상 Column 1 세율(MFN 관세율)이 아닌 Column 2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러시아산 대미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

- 기존 제재가 러시아의 특정 개인이나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 이후에는 러시아의 대미 수출 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제재가 가능함.
 - MFN 의무는 상품무역(GATT)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GATS) 및 지식재산권 보호(TRIPs)에도 관련되므로, 관세인상 외에도 러시아산 상품 수입 물량을 제한·금지하거나 서비스 무역을 규제, 또는 러시아 지식재산권의 미국 내 보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가능함.
- MFN 지위 취소의 구체적인 효과는 대러 수출통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금지(2022. 3. 8)⁶⁾ 및 수입금지 품목 확대조치(3. 11)⁷⁾에 더하여 관세인상 등 WTO 차원에서 미국이 추가로 취하는 무역조치의 범위와 형태에 따라 상이해질 전망이다.

■ [캐나다] 2022년 3월 3일에 가장 먼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MFN 지위를 철회하고 35% 관세율 적용

- 캐나다는 기존 러시아, 벨라루스산 원유수입 금지 및 금융제재(2022. 2. 28), 러시아 선박의 캐나다 입항 금지(3. 1) 등에 더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사실상 모든 상품 수입에 180일간 관세율 35%⁸⁾를 즉각 적용하였으며, 이후 의회 양원의 결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함.⁹⁾
- 한편 MFN 지위는 WTO 회원국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캐나다는 WTO 비회원국인 벨라루스에는 MFN 등 WTO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관세인상 조치를 적법하게 취할 수 있음.

■ [EU] 2022년 3월 11일 대러시아 제4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를 발표¹⁰⁾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4차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거래 금지,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 러시아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 EU산 사치품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철회’ 계획을 발표함.
- MFN 지위 취소 이후 상품 부문에서 EU는 수입관세 인상이 아닌 상품 수출입 금지조치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는 러시아에 적용할 관세양허를 새로 준비하는 작업보다 신속·실효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¹¹⁾
- 서비스 부문에서 EU는 SWIFT에서 러시아 은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이미 GATS에 따른 MFN 대우를 러시아에 적용하고 있지 않음.¹²⁾
- WTO 비회원국인 벨라루스에는 수출통제, 금융제재, 상품·서비스 무역 제한, 정부조달 금지,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가 시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절차를 중단할 것임을 3월 15일 발표함.¹³⁾

6) White House,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Executive Order 14066 of March 8, 2022.

7) White House(2022. 3. 11), “Executive Order on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8) MFN 관세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우선 적용됨.

9) Government of Canada(2022. 3. 3), “Canada cuts Russia and Belarus from Most-Favoured-Nation Tariff treatment,” News release.

10) European Commission(2022. 3. 11),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four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Statement.

11) European Commission(2022. 3. 15), “Question and Answers: four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Questions and answers.

12) Ibid.

■ [일본] 2022년 3월 16일에 러시아의 MFN 지위 취소 발표

-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WTO 지위를 취소할 예정임을 발표함.
- 이날 발표에서 어느 부문에 관세인상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일본 현지 언론은 러시아산 수산물(성게, 대게 등)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을 언급함.¹⁴⁾

■ [WTO]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MFN 지위 취소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

- WTO 협정상 회원국의 MFN 지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는 없으며,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이 그러한 사실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 일방 회원국이 자국 국내법에 기초하여 러시아에 대한 MFN 대우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는 MFN 의무 위반¹⁵⁾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위반을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ception)¹⁶⁾를 통해 WTO 협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¹⁷⁾과 MFN 의무 위반이며 '국가안보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¹⁸⁾이 대립하고 있음.
 -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하에서 WTO 회원국은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¹⁹⁾ 등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스스로] 간주하는 ... 조치'²⁰⁾를 취할 수 있음. GATS 제14조의2와 TRIPs 협정 제73조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

다. 금융제재

1) 미국 재무부 제재

- [SDN-List]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다수의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그 자회사의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및 자산을 동결(E.O. 14024)²¹⁾

- ① Vnesheconombank(VEB), Promsvyazbank(PSB)와 42개 자회사
- ② Otkritie와 12개 자회사
- ③ Novikombank
- ④ VTB Bank PJSC(VTB)와 20개 자회사

13) European Commission(2022. 3. 15), "Statement by Executive Vice-President Dombrovskis on EU Decision to Stop Treating Russia as a Most-Favoured-Nation at the WTO," Statement.

14) "Japan to revoke Russia's 'most favored nation' status over Ukraine"(2022. 3. 16), The Mainichi; "Japan to revoke Russia's most-favoured nation trade status - PM Kishida"(2022. 3. 16), Reuters에서 재인용.

15)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협정 제4조.

16) GATT 제21조, GATS 제14조의2, TRIPs 협정 제73조.

17) See, e.g., a Letter written by Ukraine to the Chair of the WTO General Council, 2 March 2022.

18) See, e.g., a Letter written by Russia to the Chair of the WTO General Council, 7 March 2022.

19) GATT 제21조 제(b)항 제(iii)호.

20) GATT 제21조 제(b)항.

21) SDN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을 의미하며, 이 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의 은행과 30일간은 거래(wind down transactions)가 가능.

- 위 은행이나 자회사가 개별 또는 함께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역시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함.

* 우리 정부는 3월 1일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등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

■ [CAPTA List]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의 미국 내 계좌 개설 및 유지 금지를 3월 26일부터 시행

* CAPTA List에 오른다고 자산동결까지 당하는 것은 아님.²²⁾

■ [에너지 대금결제] VEB, Otkritie, Sovcombank, VTB, Sberbank와의 에너지 관련 대금결제는 6월 24일까지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8)'로 유예기간 부여

■ [에너지 수입 금지]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LNG·석탄 수입금지 및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 발표

- 2022년 4월 22까지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16)'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후부터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승인이 필요함.
- 그러나 미국 내로의 수입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인도 여전히 러시아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및 정비도 가능함.

2) SWIFT 배제

■ [SWIFT]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특정('selected')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는 데 동참

- 러시아 SWIFT협회(Russian National SWIFT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약 300여 개의 러시아 은행이 SWIFT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제재로 SWIFT에서 배제되는 러시아 은행은 7개임.

* EU는 3월 2일 7개 은행 리스트 발표,²³⁾ 우리 정부도 3월 12일부로 거래중단²⁴⁾

- 러시아 1위 은행인 Sberbank가 미국 SDN-List 및 SWIFT 배제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주요 대금결제 채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Sberbank는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30%를 보유

22) Correspondent Account or Payable-Through Account Sanctions(the CAPTA List).

23) 3월 2일 7개 은행 리스트 발표: VTB Bank PJSC, VEB.RF, Bank Rossiya, Bank Otkritie, Novikombank, Promsvyazbank PJSC, Sovcombank PJSC.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01/eu-agrees-to-block-russian-banks-from-swift-sparing-key-firms>.

2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767&menuNo=4010100.

3) 신규 채권 및 지분투자 제재

■ 러시아의 주요 국영 및 민간 기업이 침략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 취득을 제재

- OFAC는 E.O. 14024에 따라 만기 14일 이상의 신규 채권과 다음 목록에 나열된 13개 법인의 신규 지분 취득 및 거래를 금지함.

- ① Credit Bank of Moscow Public Joint Stock Company
- ② Gazprombank Joint Stock Company
- ③ Joint Stock Company Alfa-Bank
- ④ Joint Stock Company Russian Agricultural Bank
- ⑤ Joint Stock Company Sovcomflot
- ⑥ Open Joint Stock Company Russian Railways
- ⑦ Public Joint Stock Company Alrosa
- ⑧ Public Joint Stock Company Gazprom
- ⑨ Public Joint Stock Company Gazprom Neft
- ⑩ Public Joint Stock Company Rostelecom
- ⑪ Public Joint Stock Company RusHydro
- ⑫ Public Joint Stock Company Sberbank of Russia
- ⑬ Public Joint Stock Company Transneft

표 2-4. 주요국의 금융제재 조치 요약

은행명	미국	영국	EU	SWIFT
Sberbank (1위 은행)	금융접근 차단	파운드 청산 금지	2014	-
VTB (2위 은행)	자산동결, 거래금지	자산동결	2014	퇴출
Gazprombank (3위 은행, 가스 결제)	주식/채권 거래금지	증권거래, 대출금지	2014	-
Bank Otkritie (민간은행)	자산동결, 거래금지	자산동결	금융시장 접근 차단	퇴출
Bank Rossiya (군사작전 재정지원)	2014 자산동결, 거래금지		금융시장 접근 차단	퇴출
Novikombank (기업자금 조달전문)	자산동결, 거래금지	-	-	퇴출
Sovcombank (민간은행)	자산동결, 거래금지	자산동결	-	퇴출
VEB (국영 대외개발은행)	자산동결, 거래금지		금융시장 접근 차단	퇴출
Promsvyazbank (국방은행)	자산동결, 거래금지		금융시장 접근 차단	퇴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외환보유고 동결	외환보유고 동결	외환보유고 동결

주: 2014는 2014년 러시아 크림병합 때부터 기제재 대상.
자료: 저자 작성.

4)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 [외환보유고 동결] 미국,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조치를 발표

- 2022년 1월 말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6,300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 금융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보유고의 미국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음.

* 2020년 말일 기준, 러시아 외환보유액 중 미국 자산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은 21%임.

그림 2-1. 러시아 외환보유액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Bank of Russia.

그림 2-2. 국가별 구성

(단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Bank of Russia Annual Report 2020.

-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미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 * 미국은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의 중앙은행에 대하여 자산동결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 연준(Fed),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등에 보관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
-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지하고, 자산동결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경제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통해 자국통화 가치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 동결 조치는 이러한 정책수단을 무력화
 -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금, 중국채권을 제외한 4,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
 - * 중국계 은행 및 금융기관도 달러나 유로화 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로 위안화 이외의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는 금을 러시아 영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금거래 시장이 뉴욕과 런던에 있어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조치는 루블화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며,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를 야기하여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음.

5)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동참

-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러시아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한국 기준 3.13일)부터 적용 중

* [3월 1일 발표]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

[3월 7일 발표]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 Rossiya

**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 시장 거래 중단²⁵⁾

3.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완화 및 실물 부문 파급 최소화를 위해 고금리 및 고강도의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조치 실시

- [금융시장] 고강도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환율(RUB/USD) 급등 및 자산가격(주식, 채권)이 폭락함.

-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환율 및 자산가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SWIFT' 배제, 자산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러 금융제재가 더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함.
- 대러 금융제재가 발효된 직후인 2월 28일 하루 만에 달러당 루블화 가치가 약 20% 하락(달러당 83루블 → 105루블)하였고, RTS(러시아 주가지수)는 2월 24일 하루 만에 약 40% 급락하였으며, 28일 이후 한시적으로 휴장

- [자본 통제] 환율 방어 및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9.5%→20%)을 단행하였으며, 공식 환율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 금지 및 대외무역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외화대금 80%를 루블화로 보유할 것을 명령함.

- 충분한 외환보유고(6,400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역량이 부분적으로 무력화
- 러시아 외환보유액의 60% 이상(약 4천억 달러)이 금융제재에 동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

-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총수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고인플레이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강도의 자본 통제를 통해 △환율 방어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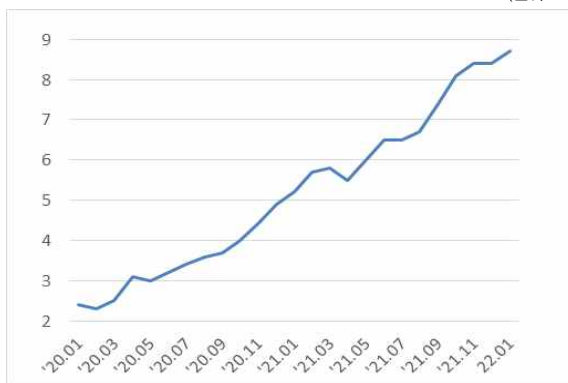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3. 7).

나,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가 불가피함.

- 2020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2년 1월까지 러시아 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2.0%→8.7%)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고인플레이션 및 고금리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이 높음.
-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환율 동조성이 높은 카자흐스탄(텡게), 우즈베키스탄(숨), 키르기스스탄(숨)의 화폐 가치 동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물 충격]** 아직 실물 부문의 충격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됨.
 - 러시아 현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약 17%,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고등경제대학(HSE)의 경제개발연구소는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20~30%, 경제성장률은 -8~-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도입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비해 고강도의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가 취해졌고 더 많은 국가(한국, 일본, 호주 등)가 제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4년과 비교하여 실물 부문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나, IMF에 따르면²⁶⁾ 매해 경제성장률 0.2%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서방의 대러 제재와 유가하락 등의 악재가 겹쳤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었음.

그림 3-1.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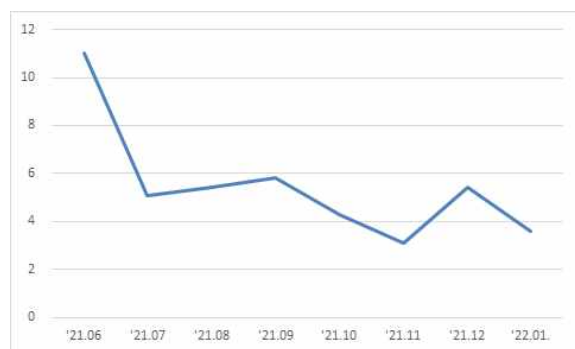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3. 10).

그림 3-2. 러시아 소매거래증가율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2. 3. 10).

나. 러시아의 대응

-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제재 동참국에 대한 ‘맞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맞제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

26) IMF(2019), Russian Federation - Article IV Staff Report, Washington DC.

- [맞제재]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보복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국이 확대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3월 5일 한국을 포함해 대러 제재에 동참한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해외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 시행
 - 동 조치는 비우호국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 러시아 정부,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이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조치로, 월 1,000만 루블 이상의 해외 채무 상환에 적용됨(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월 초 환율로 채무 상환 규모 판정 후, 상환 당일 기준 중앙은행 공식 환율로 채무 상환).
 - 비우호국에 포함된 동 조치는 자산 동결 및 달러화 거래 제한으로 인한 금융 경색을 완화하고 외환 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환율을 방어(RUB/USD)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3월 9일 반도체, 통신, 자동차, 제약, 전자기기 등 500개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8월 31일까지 설탕 전면 수출 금지 및 6월 30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 대해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 금지를 명함.
 -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동부 유럽의 농산물 수입 금지 △곡물 수출 관세를 통한 수출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는바, 향후 대러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표 3-1.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조치

분류	요약	내용
특별경제조치	외화 매출 80% 의무 매각	러시아 대외무역기업(러시아 거주자 -외국인 포함)은 '22.1.1. 이후 외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외화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각. 러시아 거주자가 외국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노동, 서비스 및 지식 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22.2.28. 부터 발생한 수익의 80%를 3 영업일 이내에 루블화로 환전
	특정 외화 거래 제한	'22.3.1. 이후 러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 계약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인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없이 본인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금지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를 줄이기 위한 매입이 아니라면, '22. 2. 1. 이후 3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22. 1. 1. 이후 일정 시점부터 3개월간 평균 주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증권중개인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특별경제조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

		당 주식을 발행한 상장회사는 '22. 12. 31.을 기한으로 하여 자사 주 매입을 허용
임시경제조치	특정 거래 제한	(i)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적 행위를 한 외국('비우호국가')과 관련된 외국인(설립지 또는 국적이 비우호국가, 주된 경제활동을 비우호국가에서 하는 모든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외국인(법인, 개인 포함)에게 루블화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모든 거래 및 상기 거래와 관련된 외국은행의 환거래계좌에 대한 외국환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ii)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도, 만일 동 외국인이 '22. 2. 22. 이후에 비우호국가의 외국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임시경제조치 적용 (iii) 예외: 상기 제한은 러시아 중앙은행 및 러시아 국가기관과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1만 USD 초과 반출 제한	'22. 3. 2. 이후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 기준 미화 1만 달러(혹은 그 상당액)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 금지
임시의무이행절차	외화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	'22. 3. 5. 이후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이하 '채무자') 등은 월 1,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로 상환 가능. 러시아의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 계좌인 C타입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 요청할 수 있음.
사전승인거래	특정 거래 시 사전 승인 필요	(i) 러시아 거주민과 외국 법인 및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개인이 증권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거나, 상기 법인 및 개인에게 대출 또는 신용 서비스 제공 시 (ii) 러시아 거주민이 비거주민에게 제공하는 외화 대출과 관련된 통화 운영 시

		(iii) 러시아 거주민이 외국 은행과 외국 지불 시스템을 통해 계좌 이체 시
특허권 법률 일부 개정	특허권 무단 사용	'22. 3. 6.부터 비우호국가에 등록된 특허보유자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대외수출통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22. 3. 9.부터 '22. 12. 31.까지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500개 품목의 목록 발표(219개 품목 수출금지, 281개 품목 수출제한)

자료: 법무법인(유) 세종,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검색일: 2022. 3. 17).

- [디폴트 우려와 대외채무 상환전략]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자산 동결 △달러 등의 외화 거래 제한 등의 금융제재로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및 기업의 금융 경색이 심화되어 대외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3월 16일 약 1억 1,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표시 러시아 국채의 이자 지급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실질적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3월 14일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장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서방의 일방적인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산 동결된 해외 금융자산을 통해 국채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자 지급 의사(채무 이행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한 바 있음.
 -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을 △채무 이행 의사가 있음에도 '실질적 디폴트'로 볼 것인지 △제재 동참국이 러시아 국채 상환에만 자산 동결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러시아가 향후 국채 이자 지급(4월 기준 1억 2,900만 달러)에도 이러한 대응전략을 고수할지 등, 러시아의 채무 이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한 상황임.

표 3-2. 달러 표시 러시아 국채(이표채) 이자 상환 일정(5월까지)

(단위: 백만 달러)

만기	이자 지급일	상환액
2043.09.16	2022.03.16	44.1
2023.09.16		73.1
2029.03.21	2022.03.21	65.6
2035.03.28	2022.03.28	102.0
2030.03.31	2022.03.31	87.5
2042.04.04	2022.04.04	84.4
2022.04.04		45.0
2026.05.27	2022.05.27	71.3
2026.05.27		32.3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5).

- 대러 제재로 인한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재정 당국은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
- [자체 지원방안] 금융경색을 완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타기팅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러시아 의회는 외국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закон о комплекс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и бизнеса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안에 의거하여 피해가 큰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기간을 2022년 3월 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²⁷⁾
 - 2022년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 중단²⁸⁾(IT 기업의 경우 2024년 말까지), 2022년 3월 1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현금 및 금융자산에 대한 면세,²⁹⁾ 2022년 3월 1일부터 귀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³⁰⁾ 등의 방안 마련
 - 2022년 2월 1일부터 3개월간 주식 평균가격이 2021년 1/4분기 평균가격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상장기업은 간소화된 주식 환매 절차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사 주식을 환매할 수 있게 됨(총 주식수를 줄이기 위한 경우 제외).³¹⁾
 - 기업대출 펀드에 추가자금이 확보되었고, 농민대출 펀드가 마련되었으며, 러시아 주식과 채권 매입을 위하여 국부펀드에서 1조 루블이 배정될 예정

4. 국제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국제유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던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하였으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우랄산 유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 원유의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 우려로 악화되며 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전쟁이 지속되며 초단기 충격은 진정되는 상황임.
 - WTI 선물은 3월 8일 장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배럴당 129.4달러를 기록한 후 3월 16일 96.3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는 전년연말대비 28.1% 상승한 수준(12월 31일 75.2달러)
 -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1.6%를 공급하는 2위 생산국
-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우랄유에 대한 구매수요가 줄어들면서 브렌트유와의 가격격차가 배럴당 23.4달러까지 확대(3월 15일)됨.
 -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ESG 측면에서 기업의 평판과 향후 제재확대 불확실성이 작용

27) “Реструктурный сдвиг: кредитные каникулы дадут при снижении дохода на 30%”(2022. 3. 4), Известия.

28) “Кабмин введет мораторий на плановые проверки ИП 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о конца года”(2022. 3. 2), ТАСС.

29)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новом этапе амнистии капитала”(2022. 3. 4), РИАНовости.

30) “Кабмин поддержал отмену НДС на драгоценные металлы для граждан”(2022. 3. 2), ТАСС.

31) “ПАО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выкупа своих акций с биржи в 2022 году по упрощенной схеме”(2022. 3. 3), ТАСС.

- 석유 메이저인 셸(Shell)사는 3월 4일 우랄유 10만 톤을 할인가에 매수하였으나, 비난 여론이 일자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원조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³²⁾
- 한편 석유 메이저인 영국 BP사는 2월 27일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사의 지분 19.75%를 매각하기로 결정³³⁾

그림 4-1. WTI 원유 선물

(단위: 달러/배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16).

그림 4-2. 우랄유-브렌트유 가격차

(단위: 달러/배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16).

■ [원자재/곡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생산비중이 높은 니켈, 소맥 등 상품 가격이 급등

- [니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6대 비철금속인 니켈의 가격이 72.3% 급등한 이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됨.
 - 니켈의 런던금속거래소(LME) 거래 가격은 톤당 2만 4,950달러(2월 23일)에서 4만 2,995달러(3월 4일)로 72.3% 상승
 - 세계 니켈 생산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11.2%)과 최근 니켈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가 직접적인 원인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생산시설 건설이 늦어짐(19년 건설 시작)에 따라 러시아가 니켈 시장에서 막대한 공급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특수강 산업을 위해 건설된 니켈 생산 능력이 최근의 니켈 가격 약세를 야기
- [소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총 29%)이 큰 소맥의 공급 차질 우려가 대두되면서 소맥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
 - 러시아는 이미 국내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소맥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소맥 공급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함.
 - * '22년 소맥 시장은 평년 수준보다 낮은 재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상황 악화가 '14년 대비 시장에 더 큰 우려를 야기함.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곡물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14년 크림 위기 당시에도 러시아는 직접적인 곡물 수출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음.

32) <https://www.cnn.com/2022/03/06/shell-defends-decision-to-buy-discounted-oil-from-russia.html>.33)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insights/press-releases/bp-to-exit-rosneft-shareholding.html>.

그림 4-3. 니켈 가격

(단위: 달러/톤)



주: 런던금속거래소(LME).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3. 16).

그림 4-4. 소맥 가격

(단위: 달러/톤)



주: CME(CBOT).
자료: Korea PDS(검색일: 2022. 3. 16).

■ [환율]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를 기록

-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예상 등으로 강세 압력을 보이는 가운데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급등함.
 - 미 달러화 지수는 2월 23일 96.19에서 3월 15일 99.03로 2.95% 상승
- 원화 환율은 달러화 강세,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상승함.
 - 3월 15일 원/달러 환율은 1,241.7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년 3월 19일 1,285원을 기록한 이후 1,200원 이하에서 등락을 보이다 24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
 - 원화의 가치 변동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대비 4%의 평가 절하를 기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상응하는 하락세를 보임(3월 16일 기준).

그림 4-5.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주: *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임(1973년 3월=100).
자료: WSJ Markets(검색일: 2022. 3. 16).

그림 4-6. 달러 대비 주요 통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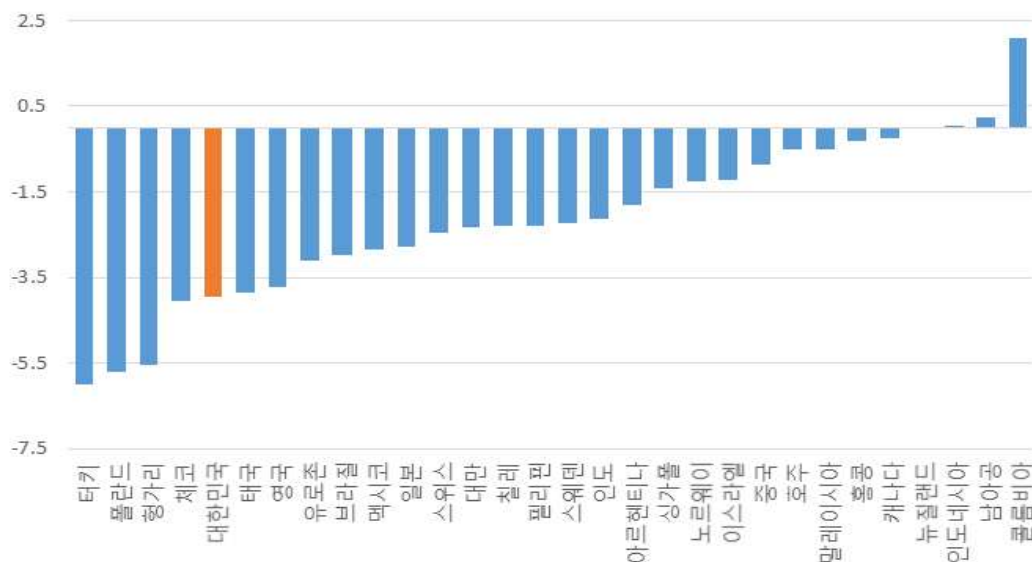


자료: WSJ Markets(검색일: 2022. 3. 16).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러시아 루블화는 폭락을 기록함.
 - 러시아 루블화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대비 23%의 평가 절하를 기록(3월 15일 기준)

그림 4-7. 주요국¹⁾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²⁾

(단위: %)



주: 1) IMF(2021), AREAER 기준 변동(Floating) 및 자유변동(Free Floating)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 중 27개 주요국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러시아, 페루 제외).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2월 23일) 대비 3월 7일 각국 통화 1단위당 달러 환율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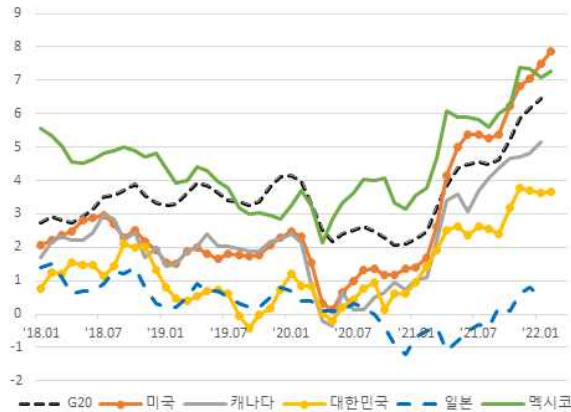
자료: WSJ Markets(검색일: 2022. 3. 16); 저자 계산.

■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로 2021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기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년 1/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에서 3%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2년 2월 7.9%를 기록함.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격차(BEI 10년과 BEI 2년의 차이)가 -1.39%p(2월 23일)에서 -1.73%p(3월 16일)로 빠르게 확대
- 한국의 경우, '20년 12월 이전 2년간 전년동기대비 1% 이하를 기록했으나, '21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2년 2월 3.7%를 기록함.
- 인플레이션의 심화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상 초유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 △ 전 세계적인 위드코로나 기조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 △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요 및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그림 4-8. 주요국 인플레이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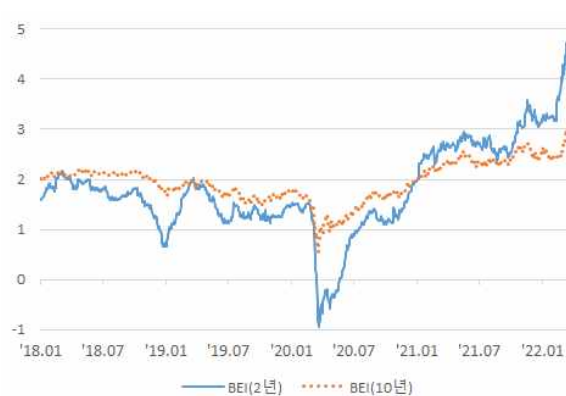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OECD stat(검색일: 2022. 3. 16).

그림 4-9. 미국 기대인플레이션(BEI)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16).

■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사이의 균형에 따라 금리 추이가 결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채권시장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상반된 경로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입과 금리 수준이 결정됨.

- ①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 국채 등의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하락
- ② 원유 공급 충격,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의 매력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내리고 금리 상승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중순 2%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의 침공일인 2월 24일 전부터 공포감 확산 및 전쟁 개시로 하락 반전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1.7~1.8%대에서 등락 중임.

- 3월 9일 기준 중동 지역에서 원유 증산 및 원유 공급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한 뉴스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금리가 재차 상승

* 그러나 당분간 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해당 뉴스의 금리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

- 독일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상승 기조에서 후퇴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EU에서 에너지 및 국방 지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기도 함.

- 향후 전망은 △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산 및 지속 기간과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출구전략이 마련되는 경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계획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완전한 우려 해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준 금리의 빅스텝 조정 가능성은 낮으며, 그에 따라 국채금리도 서서히 상승으로 반전할 전망

- 반면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ECB는 미 연준 대비 좀더 신중한 정책 변화를 가져갈 것임.
- *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채금리 또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만일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세계경제가 노출되며, 각국 중앙은행도 물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금리 인상 강도 및 시기를 더 뒤로 미루게 될 것임.
- * 이때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욱 축소되거나 역전까지도 가능

■ [금융불확실성] 지정학적 및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시현

-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가 3월 1일 33.3으로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30 수준을 유지
 - VIX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 1개월(1.24~2.23) 평균 26.2 기록하였으며, 발발 이후(2.24~3.14) 31.6으로 상승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 이후, 금융시장의 민감도 또한 높아진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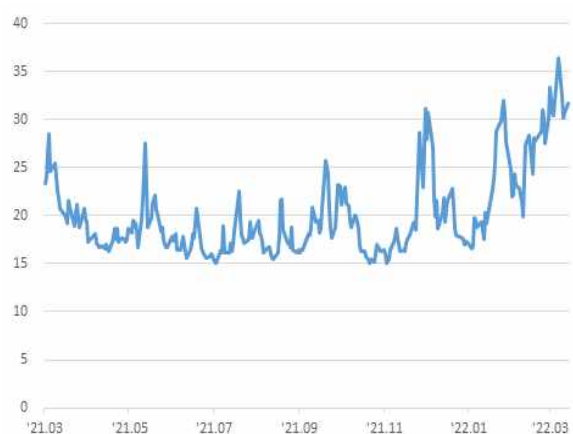
그림 4-10.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16).

그림 4-11. VI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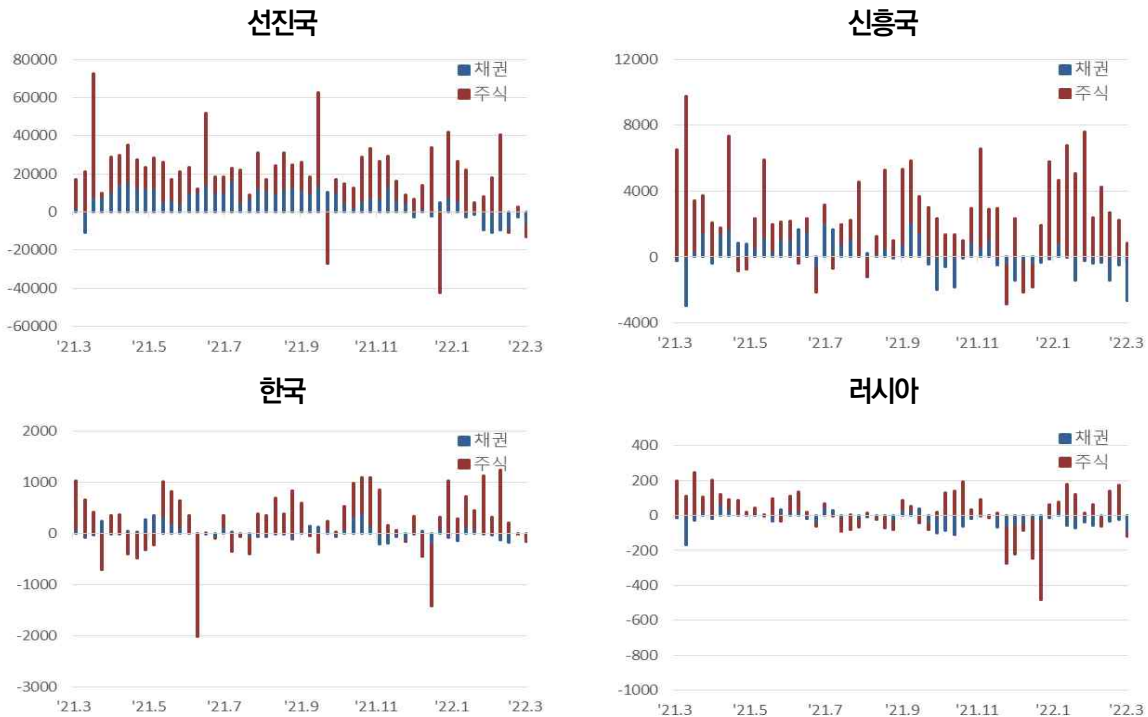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2. 3. 16).

■ [자본유출입] '21년 말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선진국, 신흥국 채권시장의 자금흐름이 유출세로 전환되었으며, 주식시장도 유입이 점진적으로 감소

- '22년 3월 2일 기준, 전주대비 러시아의 채권 및 주식은 각각 9,600만 달러, 2,600만 달러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대러시아 투자 규모(채권: 210억 달러, 주식: 600억 달러, '22. 2. 23 기준)에 비하여 제한적임.
- 러시아 경제제재의 여파로 대러시아 채권 및 주식 투자액 추정치 규모가 각 11%, 20% 하락하였으며, 향후 투자손실분을 반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4년 크림반도 병합('14. 3. 21) 당시 대러시아 투자액 규모에 큰 변동은 없었으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확대 발표일('14. 4. 28), 우크라이나 자위지원법 제정일('14. 12. 18) 등 대러시아 경제제재 발표일에 투자액 추정 규모가 각각 15%, 27% 감소

그림 4-12. 자본유출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PFR(검색일: 2022. 3. 10).

나.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이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주요 경로는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전이 등으로 구분 가능

- ① [원자재·곡물 가격의 급등]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원유 가격의 급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팔라듐, 니켈, 알루미늄 등) 및 곡물(밀, 옥수수 등) 가격의 급등
 - ②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공·영해 제재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대, 핵심기술 및 첨단부품의 대러 수출차단,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퇴출 등에 따른 세계무역의 위축
 -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이미 높은 수준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는 데다,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경기부양과 물가 억제 중 어디에 타기팅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
 - *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매파적 기초를 유지하겠지만, 이번 사태의 영향을 좀더 크게 받는 ECB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와 강도를 신중하게 조정할 것이며, 신흥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물가 억제보다는 경기부양에 무게를 둘 가능성
 - ③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전 세계 은행권의 대러 익스포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크게 축소되어 이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이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서 추가적인 대러 제재조치가 취해지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실현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세계무역이 위축될 경우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

- 다만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xford Economics(2022. 3. 8)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GDP 성장은 각각 기존 전망치 대비 0.3%p 낮은 3.7%와 3.3%로 전망

표 4-1. 주요 기관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Oxford Economics		IMF	OECD
	[2021.11]	[2022.2]	[2022.3]	[2022.1]	[2021.12]
2022년	4.6	4.0	3.7 (▼0.3)	4.4	4.5
2023년	-	3.6	3.3 (▼0.3)	3.8	3.2

주: 1) 전년대비 실질경제성장률, 2) [] 안은 전망 발표일, 3) () 안은 성장률 전망에 대한 2022년 3월과 2022년 2월 전망 사이의 조정치(p.p.).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2. 3. 9).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고강도의 대러 제재 조치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세계 무역환경과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

- [세계 무역환경]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각국 비교우위 산업의 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무역위축에 따른 경기둔화의 가능성
 - 이를테면 EU의 러시아 의존도 완화, 화석원료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경기의 변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축소,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등
- [국제금융질서]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 이후 국제금융결제망에서의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등장하면서 국제무역의 거래비용(거래불확실성 확대, 거래절차 증가)이 상승할 가능성
 - 이를테면 러시아가 중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인도, 이란 등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 내 은행 거래에서만 사용했던 금융결제망(SPFS)을 중국 금융결제망(CIPS) 등 협력국의 금융결제망과의 연계를 추진

5.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가. 미국

1) 미국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난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미 연준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하였으나, 긴축조치 속도는 경제전망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1월 기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7.5%(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였는데, 지난 3월 10일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월 CPI는 7.9%로 전월 기록을 경신하였음.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이 2월 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분은 2월 CPI에 일부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3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까지 반영될 경우 3월 CPI는 8%를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하였으나, 향후 긴축조치 속도는 경제전망에 따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류난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큰 폭의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이에 미 연준은 지난 3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에서 0.25%p 인상하기로 하면서 긴축기조로의 통화정책 전환을 알렸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 6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됨.
 - 또한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4.0%(2021년 12월 기준)에서 2.8%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 등 긴축조치 속도를 경제전망에 따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됨.

2) 미국의 對러시아 교역에 대한 영향

- 미국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대러 수출통제 조치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총수출에서 對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기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은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1조 7,544억 달러) 중 0.3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
-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수입 중 對러시아 수입비중은 1% 수준임.
 - 2021년 기준 미국의 총수입액은 2조 8,329억 달러였고, 그중 對러시아 수입액은 29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수입액 기준으로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HS코드(2자리): 27)이나 해당 품목의 對러시아 수입비중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음.

그림 5-1. 미국의 對러시아 및 그외 전 세계 수출입(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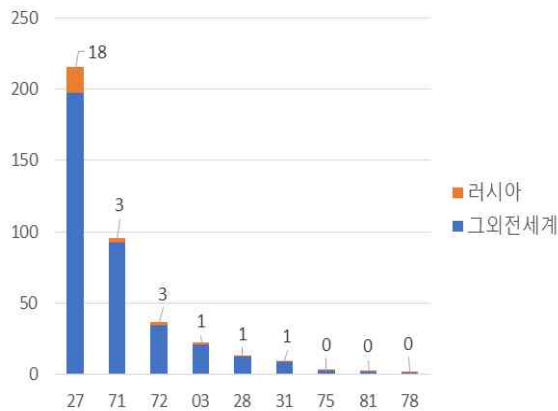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SA Trade Online.

그림 5-2. 미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입품목(2021년)

(단위: 십억 달러)



주: 각 항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임(품목명은 표 5-1 참고).
자료: USA Trade Online.

그림 5-3. 미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비중(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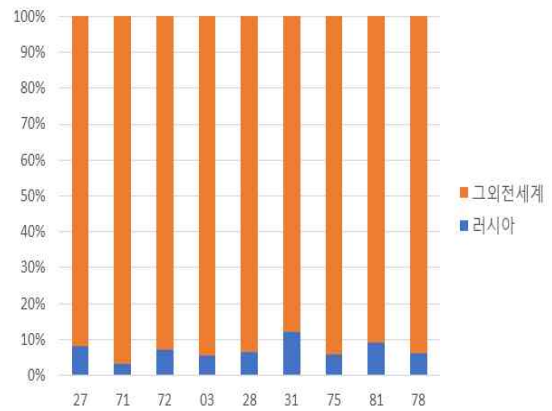


표 5-1. 對러시아 주요 수입품목명 및 HS코드

HS코드 (2자리)	품목명
27	광물성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2	철강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28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31	비료
75	니켈과 그 제품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78	납과 그 제품

3) 미국의 對러시아 직접투자에 대한 영향

■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따른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사태로 2014년에 시작된 대러 금융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금액 및 건수 모두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볼 때, 금번 제재 역시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대러 금융제재가 개시된 2014년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제재조치 이후에는 오히려 20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5-4 참고).
 - *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액은 2012년 기준 13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대러 금융제재가 시작된 2014년에는 97.6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음.
 - * 그러나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액은 제재 이후인 2015년에 102.6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하였고, 이후 2016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그림 5-4. 미국의 對러시아 직접투자 추이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 2014년 대러 금융제재가 개시된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2015년 (29건)과 2016년(38건) 2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2017년(19건)에 일시적으로 감소된 후 2018년에는 전체 프로젝트 건수(211건)의 16%인 33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표 5-2의 붉은색 상자 참고)함.³⁴⁾

34) 이대식(2021),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이면」, p. 2.

표 5-2. 對러시아 프로젝트 국가별 건수 추이

(단위: 건수)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독일	29	18	29	13	14	37	42	28	24
중국	3	4	0	4	8	12	9	32	19
프랑스	18	11	18	9	14	20	20	11	13
미국	25	24	30	24	14	29	38	19	33
핀란드	12	7	5	5	6	9	7	7	8
스위스	12	4	3	4	8	8	7	11	9
이탈리아	8	7	6	2	6	13	7	17	11
일본	11	6	9	14	10	11	12	17	13
네덜란드	3	7	4	1	1	3	5	6	8
한국	5	0	1	1	3	3	2	12	10

자료: 이대식(2020), 「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對)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 p. 163 재인용.

- 또한 러시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 * 2019년에 러시아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개 해외 기업에 미국 기업 10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상위 10위 기업에는 인텔(Intel),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펩시코(Pepsico) 3개사가 포함하고 있음.³⁵⁾
- 이상의 사실은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가 러시아의 미국 내 투자자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금융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 금융제재가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러시아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영향

■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자발적 사업 철수 또는 외부 압력에 따른 영업 중단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업의 단기적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패스트푸드, 식품·음료, 에너지, 항공, 자동차, 금융, 의류, 디지털플랫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미국 대표 기업이 민간 차원에서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표 5-3 참고).

35) Ibid.

표 5-3.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미국기업

기업명	조치 내용
McDonald's	- 러시아 내 847개 매장 일시 폐쇄
Coca-Cola	- 러시아에서 사업 중단
Pepsico	- 일부 브랜드 영업 중단
Starbucks	- 130개 매장 일시 영업 중지 - 스타벅스 제품의 러시아 공급 중단
Yum! Brands	-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외식업체 - 러시아 투자 및 신규 영업지점 개설 중단
ExxonMobil	- 4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사업 중단
Boeing	-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 중단 -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부품,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중단
Ford	- 러시아 기업인 Sollers PJSC와의 합작투자 사업 중단
Visa, Mastercard	- 러시아에서 사업 중단
Nike	- 러시아 내 온라인 제품 주문 서비스 제공 중단
Google	-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인 RT와 스푸트니크(Sputnik)에 대한 구글 광고 도구 및 YouTube 일부 기능 이용 제한
Meta(前 Facebook)	- RT와 스푸트니크의 페이스북 계정 차단
Apple	-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 중단 - 러시아 내 애플페이 및 애플맵 서비스 이용 제한 - 앱스토어에서 RT뉴스 및 스푸트니크뉴스 앱 다운로드 제한
Netflix	- 러시아 제공 서비스에 국영채널을 추가하지 않기로 함.
Airbnb	-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서 모든 운영 중단
Alcoa	- 러시아 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 구매 또는 제품 판매 중단

자료: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5) 미국 산업계 영향 및 반응

■ [에너지] Pioneer Natural Resources의 CEO Scott Sheffield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석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인 그룹에 합류함.³⁶⁾

- Sheffield는 러시아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국 생산자들이 공급 격차를 빠르게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함.
- 또한 이번 제재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반도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³⁷⁾

- SIA는 러시아의 반도체 칩 구매량이 전 세계 소비량의 0.1% 미만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ICT 시장규모(전 세계 시장규모는 4조 4,700억 달러로 추정)가 50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힘.
- 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와 에너지 공급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즉각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힘.

36) <https://www.ft.com/content/1b517f6d-9056-41ba-9d1e-324e495b5041>.

37) <https://www.semiconductors.org/sia-statement-on-sanctions-on-russia/>.

■ [주요 광물]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니켈,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 시스템과 휴대폰 생산에 사용되는 팔라듐 등의 주요 금속 가격이 기록적으로 급등함.³⁸⁾

- 러시아의 니켈, 팔라듐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의 9.3%, 42.8%를 차지하고 있음.
- 런던금속거래소(LME)상 니켈 가격은 톤당 4만 2,995달러(3월 7일 기준) 이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2월 23일 기준)대비 70% 이상 상승함.
 - 특히 니켈의 3개월물 가격은 3월 8일 거래소 개장 전에 이미 10만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LME는 니켈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함.
-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팔라듐과 같은 재료를 미리 비축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인 영향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 갈등과 대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자원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함.

6) 대응

■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재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 부담이 커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비축량을 방출하는 한편 더 많은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협력도 검토 중임.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제재 발표 이후 발언에서 러시아 이외에 다른 산유국 및 소비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에 전략비축유 매장량 중 일부 방출 장려 계획을 발표함.³⁹⁾
-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 금지 발표에 대한 고위 행정부 관리 보도자료를 지난 3월 8일에 공개함.⁴⁰⁾
 -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전략비축유 9,000만 배럴 이상을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이는 IEA에서 공동으로 6,000만 배럴(3,000만 배럴은 미국에서 방출) 규모의 비축유 방출 조치계획을 포함함.
 - 미국이 안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단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이 국내 및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다른 석유 생산국이 석유를 경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을 강조
- 미 정부는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기 전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 협상을 검토함.⁴¹⁾
 - 베네수엘라는 경제난과 제재로 석유업계가 붕괴되기 전까지 총 수출량 중 4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원유 공급국이었음.

38) <https://asia.nikkei.com/Business/Markets/Commodities/Palladium-copper-and-nickel-hit-historic-highs-on-Russia-sanctions>.

3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2/24/remarks-by-president-biden-on-russias-unprovoked-and-unjustified-attack-on-ukraine/>.

4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2/03/08/background-press-call-on-announcement-of-u-s-ban-on-imports-of-russian-oil-liquefied-natural-gas-and-coal/>.

41) <https://www.wsj.com/articles/u-s-officials-meet-with-regime-in-venezuela-to-discuss-oil-exports-to-replace-russias-11646591752>.

-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원유 공급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베네수엘라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할 기회를 얻고자 함.
-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을 통해 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을 검토하면서 유가 급등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함.
-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다른 독재 정권 사이에서 자원을 이동시킬 뿐 국내 생산 및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함.

나. 유럽

1) 영향

■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EU의 에너지 수급에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 EU의 에너지 수입량에서 러시아는 원유 26.9%(1위), 석탄 46.7%(1위), 천연가스 41.1%(1위)를 차지함.⁴²⁾
 - 주요국 중 특히 독일의 대러 에너지 의존이 높고, 러시아와 관계가 비우호적인 편인 동유럽 국가들도 대러 에너지 의존이 높아져, 대러 에너지 의존이 '트로이 목마'라는 우려도 제기됨.⁴³⁾
 - 높은 대러 의존도 때문에 EU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관련 대러 제재에 소극적임.
- EU 내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 관련 위험 부각 시마다 크게 변동해왔는데, 이번에도 EU 내 주요 천연가스 가격지수인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톤당 200유로까지 급등함.
 - 그러나 EU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대러 수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

■ 우크라이나산 핵심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 발생함.⁴⁴⁾

- 우크라이나는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핵심부품인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의 주요 생산국임.
 - 와이어하네스는 자동차 내 전기장치들을 연결하는 전선 묶음으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차량별 특화 필요에 따라 주로 노동비용이 낮은 인접국에서 생산
 - EU의 와이어하네스 수입 중 우크라이나가 약 7% 차지
 - 한국의 자동차 생산 가치사슬에서도 와이어하네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42) Eurostat, "From where do we import energy?"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energy/bloc-2c.html#carouselControls?lang=en>(검색일: 2022. 3. 10).

43) Reuters(2016. 4. 7), "Nord Stream-2 gas pipeline is Trojan Horse, says Naftogaz," <https://www.reuters.com/article/eu-nordstream-naftogaz-ukraine-idUSL5N1794XJ>(검색일: 2022. 3. 10).

44)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20. 3. 3), "Europe faces increasing problems with supply chains."; Reuters(2022. 3. 3), "Ukraine invasion hampers wire harness supplies for carmakers."; 중앙일보(2020. 2. 5), 「'와이어링 하네스'가 뭐길래... 현대차그룹 약 6000억 손실날듯」.

- 우크라이나산 와이어하네스 공급 중단으로 EU의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 발생함.
 - 유럽의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폴란드 소재 공장 2개를 중지시켰고, BMW와 포르쉐(Porsche)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공장을 중지시키는 등 유럽 전역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가동에 차질 발생

2) 대응

■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을 낮추려 하는 가운데, 천연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EU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탈탄소를 위하여 러시아산을 포함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고, 이번 사태 이후 대러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공급선 다변화, 재생가능 가스 개발 등을 추진 중⁴⁵⁾
 - ‘친환경 경제활동분류체계’인 EU Taxonomy에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친환경 가스의 비중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미국정부 또한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을 낮추고자 2019년에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변화법(European Energy Security and Diversification Act of 2019)’을 제정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음.⁴⁶⁾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선 다변화로 2022년 말까지 대러 가스 의존율을 기존의 1/3까지 줄인다는 계획(REPower EU)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탄소중립 계획과의 상충으로 완전한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⁴⁷⁾
 - 기존의 탄소중립 계획에서 천연가스 발전이 중간 단계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를 당장에 전부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의 경우 탈화석연료와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던 기존 전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짐.
 - 천연전 정책을 내세우는 프랑스, 동유럽 등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EU Taxonomy 인정 확대, 지원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EU는 자동차생산 가치사슬 내 핵심 부품 수급에서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다.⁴⁸⁾

- 이미 와이어하네스 등 핵심 부품의 수입처를 변경하고자 동유럽, 북아프리카 등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45) Euractiv(2022. 3. 10), “EU rolls out plan to slash Russian gas imports by two thirds before year end,”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eu-rolls-out-plan-to-slash-russian-gas-imports-by-two-thirds-before-year-end/>(검색일: 2022. 3. 10).

46) European Energy Security and Diversification Act of 201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453?q=7B%22search%22%3A%5B%22H.+R.+83%22%5D%7D>(검색일: 2022. 3. 10).

47) EU Commission,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검색일: 2022. 3. 16);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22. 3. 14), “Ukraine war makes EU climate targets less achievable.”

48)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20. 3. 3), “Europe faces increasing problems with supply chains.”; Reuters(2022. 3. 3), “Ukraine invasion hampers wire harness supplies for carmakers”; 중앙일보(2020. 2. 5), 「‘와이어링 하니스’가 뿔길래... 현대차그룹 약 6000억 손실날듯.

- 러시아의 침공 전에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피하고자 우크라이나 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고, 볼보(Volvo)는 우크라이나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아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덜 받음.
- 자동차 부품 생산에서 우크라이나의 장점이 유럽 내 주요 완성차 생산기지에 가깝고 숙련노동이 저렴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부품 생산기지를 중동부유럽의 EU 회원국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짐.

다. 중국

1) 영향

■ **[정치·외교적 영향]**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주권 존중’이라는 대외정책의 원칙과 ‘중·러 우호관계 유지’라는 외교노선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임.

-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러 관계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자산의 하나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교류와 협력을 해온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됨.
 - 주권존중과 영토보존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줄곧 강조해온 중요 가치임.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양안문제와 일대일로 추진, 이른바 ‘대국관계’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양안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두 지역(DPR, LPR)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지지할 수 없는 입장임.⁴⁹⁾
 - 중·러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행위를 지지한다면, 향후 대만과 신장(新疆)위구르, 시장(西藏)티베트 등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서방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국은 비판할 명분을 상실하게 됨.
- [미·중, 중·EU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중국에 유리한 측면도 존재하나, 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임.
 -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미국 및 EU와의 관계 악화가 동반될 것인바, 안정적인 대국관계 관리가 필요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편한 상황
- [일대일로]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선국가로서 여기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더욱이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對러시아 규탄 및 제재에 동참하지 못함에 따라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실패

49)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도 중국은 동일한 입장이었음.

글상자 5-1. 중국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관계

[중국-러시아 양자관계]

- ▶ 중국과 소련은 1949년 10월 국교 수립 후, 소련의 해체에 따라 1991년 12월에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관계를 계승했고, 2011년에 양국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를 체결
- ▶ 인문, 사회, 군사,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같이 다양한 다자체제에서도 협력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자평

[중국-우크라이나 양자관계]

- ▶ 양국은 1992년 1월 4일 국교 수립 후, 2001년 '전면적 우호협력관계(全面友好合作关系)'를 거쳐, 2011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战略伙伴关系)'로 발전
- ▶ 2011년부터 정부간 협력 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2020년 12월 4차 회의 개최),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가임.

주: 1)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국이 유일하게 러시아하고만 맺은 양자관계로서 중국의 양자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2)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 체코, 카타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중국이 한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보다는 한 단계 낮은 양자관계로 평가됨.

■ [경제적 영향] 중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의 총액이 중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015~20년 평균)이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8%(2015~20년 평균) 수준으로 낮음.
 - 중국의 對러시아 투자는 2020년 약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양국간 교역은 2015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중국 교역액에서의 비중은 2.2%로 미미한 수준
 - 중국의 對우크라이나 투자는 2020년 기준 1.9억 달러로 중국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은 0.01%으로 매우 낮으며, 2020년 양국의 교역이 중국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에 불과

표 5-4. 중국의 對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역 및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對러시아 투자액	14,020 (1.3)	12,980 (1.0)	13,872 (0.8)	14,208 (0.7)	12,804 (0.6)	12,071 (0.5)
對러시아 교역액	63,064 (1.6)	66,044 (1.8)	86,678 (2.1)	108,241 (2.4)	108,771 (2.4)	102,978 (2.2)
對우크라이나 투자액	69 (0.01)	67 (0.01)	63 (0.003)	91 (0.01)	158 (0.01)	190 (0.01)
對우크라이나 교역액	6,170 (0.2)	6,520 (0.2)	7,771 (0.2)	9,808 (0.2)	12,794 (0.3)	15,464 (0.2)

주: 1) 소괄호안의 숫자는 중국의 교역액 및 해외직접투자액(ODI)에서의 비중을 의미 2) 투자액은 당해연도 별 해외직접투자의 스톡(stock)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1) 투자액은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主编(2021), 「2020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p. 59~60, 2) 무역액은 무역협회(<https://stat.kita.net>), 모든 자료의 검색일(2022. 3. 10).

■ 단 중국은 러시아産 원유·천연가스·석탄·알루미늄·비료와 우크라이나産 옥수수·보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수급 및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석탄(코크스) △알루미늄 △천연가스 △비료 수입의존도는 각각 16%, 11%, 17.3%, 18.9%, 27.9%를 차지⁵⁰⁾하며,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보리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7.1%, 25.8%를 차지함.⁵¹⁾

■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국이 되면 중국 금융기관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되거나, 반도체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⁵²⁾

- 현재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⁵³⁾
 - 반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원자로·보일러·기계 및 부품과 전기·영상기기 및 부품이 중국의 러시아 수출 주력품목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⁵⁴⁾
 -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러시아 SWIFT 배제로 중국-러시아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의 CIPS⁵⁵⁾를 활용한 위안화 거래로의 대체를 통해 중·러 경제 교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중임.

2) 대응

■ [외교적 대응] 중국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피란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침공(入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대신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俄乌冲突, conflict)’ 또는 러시아의 ‘특별군사행동(特别军事行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왕이 외교부장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충돌은 복잡한 요인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중국 입장을 네 가지로 설명함(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답변 내용, '22. 3. 7).⁵⁶⁾
 -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 및 보장 △분쟁 당사국들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 △대화과 협상

50) 海通证券(2022. 2. 25), 「俄乌冲突: 影响哪些经济?」, p. 6; 中辉期货(2022. 2. 25), 「俄乌冲突-前因、后果、影响」, pp. 12~13. 원유는 2021년 12월의 일별 수입량을 기준으로 작성(중국의 대세계 수입: 1,090만 배럴, 그중 러시아 수입은 175만 배럴), 비료와 석탄은 2021년 연간 수입량을 기준으로 작성, 알루미늄과 천연가스(수송관을 통한 수입)는 2021년 11월까지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작성.

51) 海通证券(2022. 2. 25), 「俄乌冲突: 影响哪些经济?」, p. 7.

52) The New York Times(2022. 3. 8), “Chinese companies that aid Russia could face U.S. repercussions, commerce secretary warns,” <https://www.nytimes.com/2022/03/08/technology/chinese-companies-russia-semiconductors.html>(검색일: 2022. 3. 10); Martin Chorzempa(2022. 3. 7), “New technology restrictions against Russia could also target China,”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new-technology-restrictions-against-russia-could-also-target>(검색일: 2022. 3. 10)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53) 新浪网(2022. 2. 28), 「SWIFT系统排除俄银行, 外交部回应」, http://k.sina.com.cn/article_1887344341_707e96d5020017w9d.html(검색일: 2022. 3. 12).

54) 2021년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액 중 원자로·보일러·기계 및 부품과 전기·영상기기 및 부품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147억 달러, 1위), 20.9%(141억 달러, 2위)임. 中辉期货(2022. 2. 25), 「俄乌冲突-前因、后果、影响」, p. 10.

55) CIPS(China'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는 2015년 중국인민은행이 구축한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으로 2022년 3월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심으로 128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이 중 직접참여자는 75개, 간접참여자는 1205개임.

56) 环球网, 「一次看全! 王毅回答中外记者提问!」,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pageType=1&context=%7B%22nid%22%3A%22news_8951658176326322080%22,%22sourceFrom%22%3A%22bjh%22%7D(검색일: 2022. 3. 15).

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유럽 안보체제 구축 필요

- 동시에 국제사회의 당면한 임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대화를 촉구하고 충돌로 인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따라 중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3월 9일 중국의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1차로 식품과 생필품 등 10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제공(2차: 3월 12일, 3차: 3월 14일)

- 장쑤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긴급특별총회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규탄 및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함(장쑤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긴급특별총회 발언, '22. 2. 28).

- 2월 28일 개최된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제기된 對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취하는 행동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각 당사국의 보편적인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긴장 국면을 안정화시키고 외교적 해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순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찬성하지 않는다”⁵⁷⁾고 기권 표시

- 동시에 중국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이행할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할 것”⁵⁸⁾이라고 주장

■ [경제적 대응] 3월 초 중국 국무원 언론브리핑에서 정부 주요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고 언급함.⁵⁹⁾

- 3월 2일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귀수칭(郭树清) 주석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중국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⁶⁰⁾

- 중국 경제·금융이 모두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

- 3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런웨이량(连维良) 부주임은 중국이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입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함.⁶¹⁾

- 중국은 에너지 소비대국이자 생산대국이므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은 원활한 편이며, 원유·천연가스 수입 루트가 이미 다원화되어 있고 장기계약 비중이 높아 에너지 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

- 또한 최근 중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여 에너지 공급 관련 외부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힘.

- 3월 15일 국가통계국 푸링후이(付凌晖) 대변인은 중국 무역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57) 「俄乌代表相互指责，中方表态！」,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051320495240417&wfr=spider&for=pc>(검색일: 2022. 3. 15).

58) 위의 자료

59) 중국 내 주요 전문가들도 중국경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일부 에너지·농산물·비철금속의 국제 가격 상승이 중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유럽 등 국가에 비해 크게 낮으며, 중국 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고 위안화 환율이 강세여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음. 新浪财经(2022. 3. 9), 「野村证券陆挺：央行上缴万亿利润体现积极财政，俄乌冲突对中国经济直接影响较小，不必过度悲观」,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783648062413152&wfr=spider&for=pc>(검색일: 2022. 3. 10); 中债资信(2022. 3. 10), 「中债研究 | 俄乌冲突对能源等领域的影响分析」, <https://cj.sina.com.cn/articles/view/3787884325/e1c68725019011ghy>(검색일: 2022. 3. 11).

60) 封面新闻(2022. 3. 2), 「银保监会郭树清：有关国家对俄经济制裁对我国经济不会有太大影响」, <https://news.sina.com.cn/o/2022-03-02/doc-imcwipih6229889.shtml>(검색일: 2022. 3. 9).

61) 每日经济新闻(2022. 3. 7), 「俄乌冲突是否会冲击中国经济？国家发改委回应了」,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622587452636364&wfr=spider&for=pc>(검색일: 2022. 3. 8).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지정학적 변화로 인하여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⁶²⁾

- 복잡한 국제정세로 국제상품가격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전방산업 관련 가격 상승 및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중국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투자·소비·공업 성장의 긍정적 변화가 뚜렷하고, 2021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유리한 상황이며 외부영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될 수 있다고 언급

■ **롄웨이량(连维良) 부주임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입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시킬 종합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자원의 공급 증대와 안정이 핵심 정책이라고 밝힘.**⁶³⁾

- 에너지자원의 생산능력 강화 및 생산량·비축량·공급의 증대와 함께 수입·가격·전망치(预期)의 안정을 추구 하면서, 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이밖에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함께 평화협력·개방포용·상호 교류·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로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SWIFT 제재에 대비하여 중국은 러시아와 국제 결산업무를 수행중인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CIPS)의 확장을 모색 중임.**⁶⁴⁾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각 은행의 러시아 관련 거래 실태를 조사하면서 러시아와 국제 결산업무를 수행 중인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리스크 평가를 진행함.⁶⁵⁾
 -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과 관련된 거래와 사업 전부의 리스크 점검
 - 서방의 제재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중국 금융기관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 등에도 대비
- 중국은 이번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를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시대 금융안보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함.
 - 2021년 CIPS의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79.6조 위안,⁶⁶⁾ 거래수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330만 건으로 최근 외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⁶⁷⁾
 - 중국은 러시아 외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과 위안화 국제결제 협력을 강화하여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62) 中国经济网(2022. 3. 15), 「国家统计局: 俄乌冲突对中国经济直接影响有限」, http://www.ce.cn/xwzx/gnsz/gdxw/202203/15/t20220315_37403556.shtml(검색일: 2022. 3. 15).

63) 每日经济新闻(2022. 3. 7), 「俄乌冲突是否会影响中国经济? 国家发改委回应了」,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622587452636364&wfr=spider&for=pc>(검색일: 2022. 3. 8).

64) Reuters(2022. 3. 7), 「中国外管局摸底部分银行和俄罗斯银行相关业务 强化业务管理和风控一消息」,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safe-banks-russia-risk-0307-idCNKBS2L40VC>(검색일: 2022. 3. 12).

65) Ibid.

66) 2021년 SWIFT 거래 규모(약 140조 달러)의 약 8.57% 수준.

67) 新华网(2022. 2. 28), 「在全球范围内 越来越多的人正在采用上海推出的金融标准」, http://sh.news.cn/2022-02/28/c_1310491783.htm(검색일: 2022. 3. 12).

-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중·러 간 금융협력 확대에 이어져 △CIPS 활용도 제고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등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CIPS가 SWIFT를 우회하거나 대체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CIPS를 사용하여 비(非)위안화 결제⁶⁸⁾를 진행하는 경우, SWIFT를 거쳐야 하므로 SWIFT 배제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함.
 - CIPS를 사용하여 위안화 결제를 진행할 경우, 낮은 중·러 간 무역·투자 규모, 낮은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⁶⁹⁾ 위안화 금융상품의 낮은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대러시아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 또한 CIPS를 통한 위안화 결제시에도 직접참여자 간에는 SWIFT를 거치지 않고 CIPS를 통한 독자적인 거래가 가능하나, 직접참여자 간 거래는 여전히 SWIFT를 거쳐야 함.
 - 즉 중·러 간 SWIFT를 거치지 않고 CIPS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결제는 CIPS 직접참여자 간 위안화 국제결제에만 해당되므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라. 일본

1) 영향

- 일본은 러시아의 GDP 규모가 일본의 1/3에 불과하고, 원래 에너지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영향은 경미하다는 게 중론임.
- 2020년 기준 일본의 전체 수출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0.9%, 수입 1.7%에 불과하고, 러시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flow) 비중은 0.28%에 불과함.

표 5-5. 일본의 對러시아 교역 및 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5,115,648	5,125,597	6,005,844	7,297,275	7,173,900	5,870,453
비중*	0.8	0.8	0.9	1.0	1.0	0.9
수입	15,760,413	11,285,020	13,802,758	15,577,258	14,311,740	10,699,448
비중*	2.4	1.9	2.1	2.1	2.0	1.7
해외직접투자	468,287	109,226	242,484	478,432	413,829	428,856
비중*	0.34	0.06	0.14	0.30	0.16	0.28

주: * 일본의 전체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중 러시아에 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JETRO.

68) 2021년 CIPS 국제결제 중 17.3%만 위안화 거래이고, 82.7%는 SWIFT를 거쳐야 하는 비위안화 거래임. 知乎(2022. 3. 1), 「切断俄SWIFT系统后, 人民币支付系统CIPS面临的困难和发展前景」, <https://zhuanlan.zhihu.com/p/473961595>(검색일: 2022. 3. 12).

69) 2022년 1월 기준 SWIFT 국제결제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임. 央广网(2022. 2. 7), 「人民币全球支付比例上升到3.2%创历史新高 专家: 超英镑成为第三大国际货币只是时间问题」, <https://baijiahao.baidu.com/s?id=1725002922121113994&wfr=spider&for=pc>(검색일: 2022. 3. 12).

- 3월 7일 러시아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지역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됨.
 - JETRO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은 약 107억 달러였고, 이 중 석유가스(24.1%), 석탄(18.1%), 원유(16.6%) 등이 대부분이고 은·백금 등 금속(10%), 해산물(8.9%)이 뒤를 이었음.
 -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매출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하고, 이미 물류·결제 시스템의 혼란으로 현지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있음.
-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WTI 원유선물가격이 13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에 따른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을 '연간 실질GDP 0.2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주가하락과 엔화 평가절상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실질 GDP 감소폭은 1.11%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2) 대응

■ 일본은 조만간 쿼드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쿼드 4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일본정부는 러시아로부터 LNG 공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임.
 - 다만 미국이 검토 중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우선’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
- 2007년 일본의 ‘극동·동시베리아 일·러 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이후 일본의 극동지역 협력사업의 한 축인 ‘사할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 기업과 정부는 사업철수에 난색을 표명함.
 - 일본 경제산업성과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등이 지분참여하고 있는 ‘사할린 1’ 원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영국 쉘의 사업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당사자들은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
 - * 일본이 사할린 1 프로젝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원유는 러시아산 원유의 약 40%를 차지함.
 - 지난 2월 말 영국의 엑슨모빌이 사업철수를 표명한 ‘사할린 2’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 측은 에너지 안정공급 측면에서 사업철수에 난색을 표명. 일본 측이 사업에서 철수하면 그 공백을 중국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 일본은 사할린 2 프로젝트로부터 2009년부터 LNG 수입의 10%를 충당하고 있고,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는 각각 12.5%와 10%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 최대 주주는 가스프롬(50%+1주)임.

■ 대내적으로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춤.

- 일본정부는 3월 16일 도매 석유업체에 대한 휘발유 보조금 상한액을 리터당 5엔에서 25엔으로 인상하고 이에 필요한 3,50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함.
 - 일본에서의 휘발유 가격은 3월 16일 기준 189.7엔으로 2008년의 과거최고치 185.1엔을 경신함.

6.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거시금융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한적이나 △금융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전형적인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세 발현됨.
- 우크라이나 사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1년부터 지속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긴축적 정책기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는 향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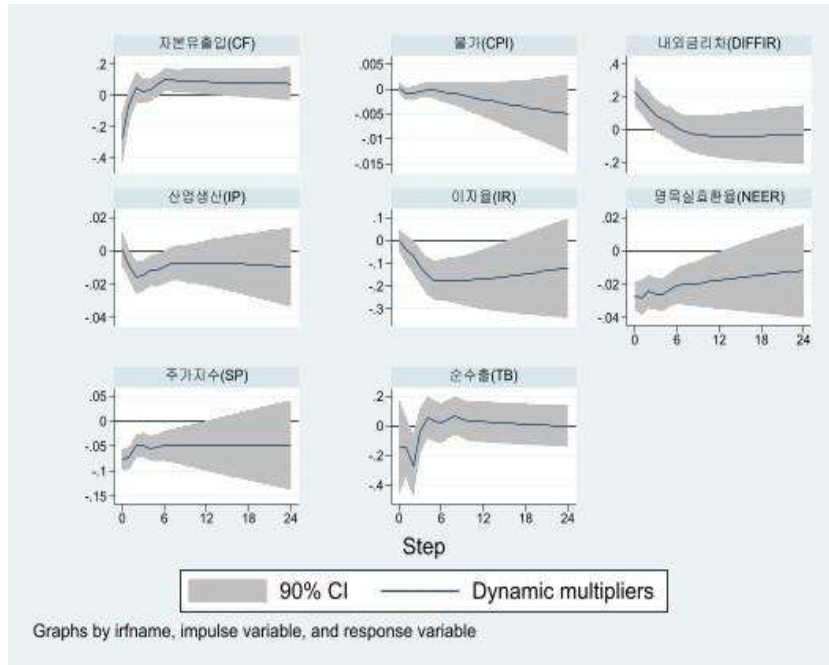
■ 금융시장 불확실성, 유가상승, 세계경제 충격 등의 외부 환경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VAR)으로 추정함.⁷⁰⁾

- [금융불확실성] 월평균 VIX 지수가 5 증가하는 금융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0.35%, 2021년 GDP 기준 7조 원 추정), 명목통화가치 하락(▼0.15%), 주가지수 하락(▼0.35%)을 가져오며, 산업생산지수가 3개월 후 최대 0.1%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기간은 2005년 1월~2020년 12월 월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VAR의 시차는 3개월로 설정함. 한국 변수로 이자율(IR), 대외금리차(DIFFIR), 주가지수(SP), 실질실효환율(NEER), 자본유출입(CF), 산업생산(IP), 물가(CPI), 순수출(TB)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금융불확실성(VIX), 유가(COMP), 세계생산(OECDIP)을 외생변수로 사용⁷¹⁾

70) 안성배 외(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의 제5장 분석을 한국경제에 적용함.

71) 기존 연구에서 이자율(IR)의 충격반응함수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임. 정책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정책여력이 없는 신흥국은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의 이자율 반응함수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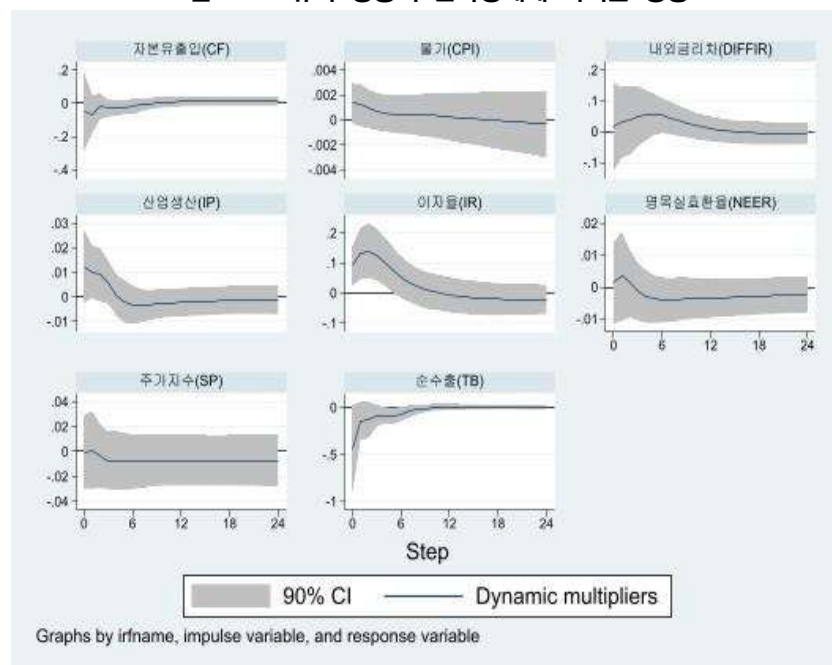
그림 6-1. 금융불확실성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저자 계산.

- [유가상승] 유가상승에 대하여 한국의 순수출 감소, 물가상승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다만 분석기간(2005~20년)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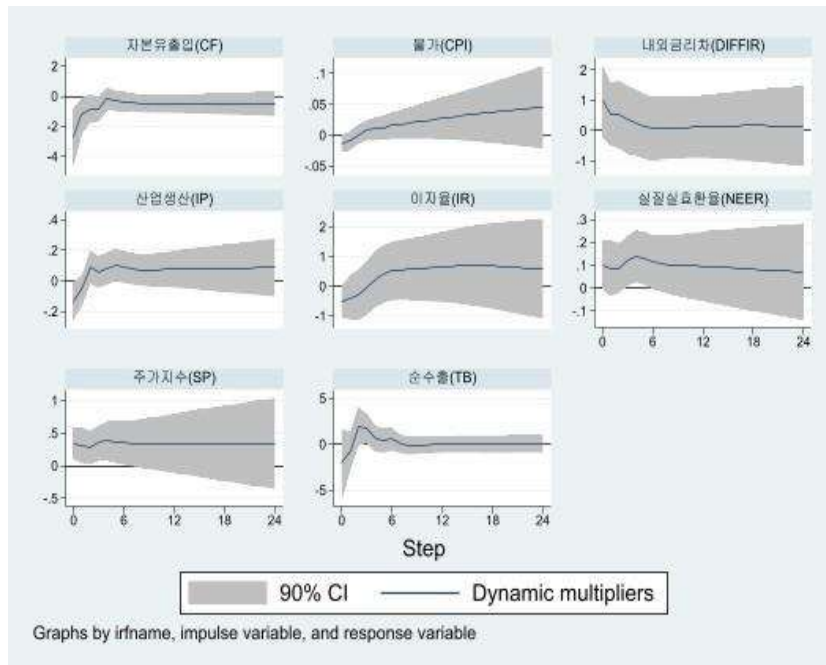
그림 6-2. 유가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저자 계산.

- [세계경제 둔화] OECD 산업생산이 1% 감소하는 세계경제 둔화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 0.06%), 산업생산을 하락(▼0.11%)시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림 6-3. 세계경제 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저자 계산.

-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경제의 공급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킴.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곡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국내 물가 상승세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대체를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 관련 글로벌 그린전환 정책기조와 마찰이 예상됨.
 -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곡물 가격 상승 압력 우려
 -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
- 확전은 세계경제 관점에서 하방 공급충격과 상방 수요충격으로 작용함.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하방 복합충격과 성격이 달라 정책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 불확실성 충격의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긴축정책은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국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금리상승은 높은 가계 및 국가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요인으로 작용

나. 교역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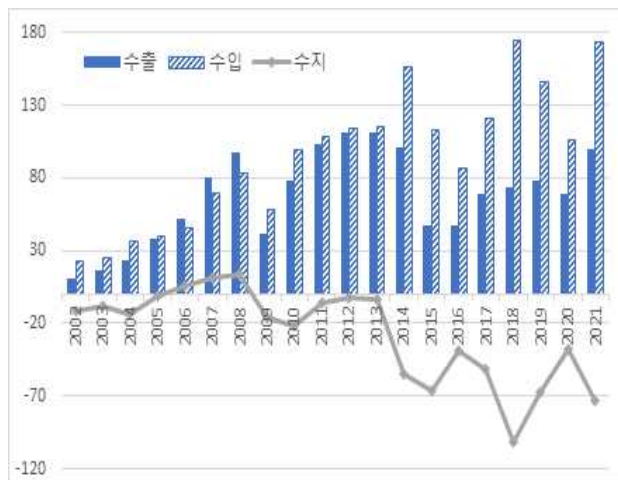
1) 한-러 교역 및 투자 현황

■ 한국의 대러 교역은 2014년 2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크림반도 사태 이후 대러 제재가 강화된 2014년 7월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임.

- 우리나라 대세계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5%(100억 달러), 수입은 2.8%(174억 달러)임.
- 한국은 원자재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대부분의 시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수출이 급감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가 최근 다소 줄어들음.

그림 6-4. 한국의 대러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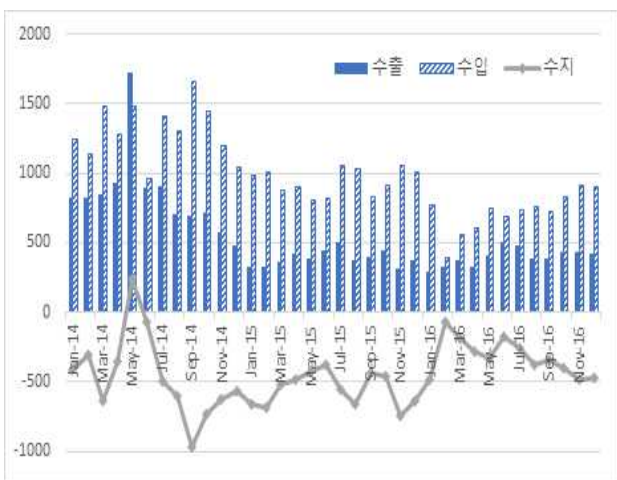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3. 8).

그림 6-5. 2014~16년 한국의 대러 월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3. 8).

■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수입품목은 나프타, 원유, 유연탄이며, 2010년 이후 한국은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교역함.

- 승용차,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의 경우 최근 한국의 품목별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 비중은 6% 내외, 합성수지는 2% 미만임.
- 수입에서는 2010년대 접어들어 특히 나프타와 유연탄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각각 23.4%와 16.3%임.
 - 같은 시기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한국의 품목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와 6.7%임.

표 6-1. 한국의 대러 주요 교역품목(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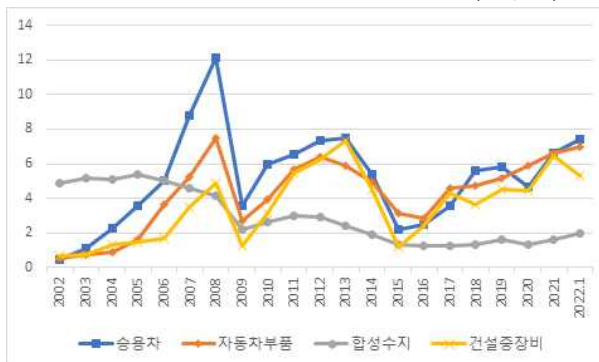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승용차	2,549	25.5	나프타	4,383	25.3
2	자동차부품	1,509	15.1	원유	4,269	24.6
3	철구조물	487	4.9	유연탄	2,203	12.7
4	합성수지	476	4.8	천연가스	1,715	9.9
5	건설중장비	425	4.3	백금	593	3.4
6	화장품	290	2.9	계	453	2.6
7	아연도강판	211	2.1	무연탄	363	2.1
8	기타플라스틱제품	174	1.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02	1.7
9	선박	139	1.4	고철	267	1.5
10	의자	119	1.2	우라늄	252	1.5
	소계	6,381	63.9	소계	14,801	85.3

주: MTI 4단위 기준, 비중은 한국의 대러 전체 수출입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3. 8).

그림 6-6. 품목별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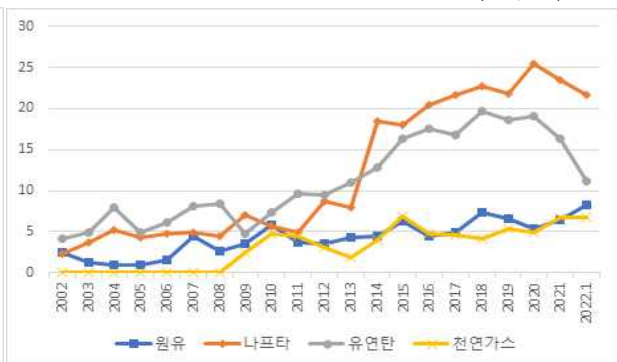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3. 8).

그림 6-7. 품목별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3. 8).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2% 수준이며,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으로 낮음.

-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림반도 사태직전인 2013년에 6,000만 달러에서 2020년 현재 3,100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동기간 29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임.
 - 크림반도 사태 이후 14억 달러(2015년)까지 감소한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이후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러시아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으로 낮음.

그림 6-8. 한국의 대러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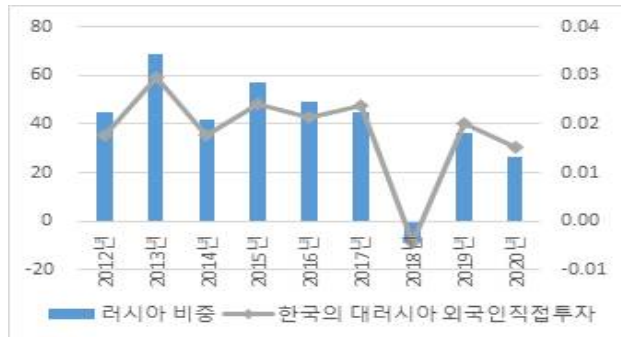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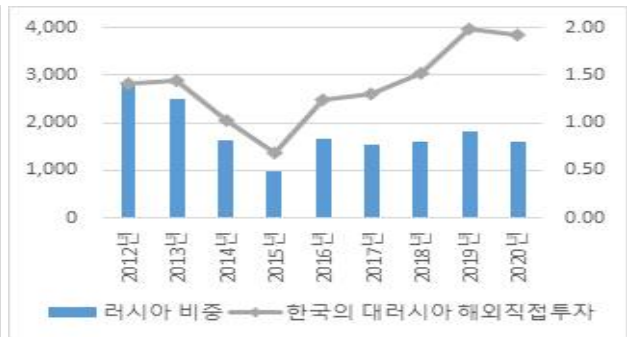


그림 6-9. 한국의 대러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투자금액은 자량(stock) 기준이며, 비중은 전 세계 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신규투자금액보다 화수금액이 크거나 가격 및 환율 변동과 기타 조정 등에 의해 투자금액이 음(-)으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IMF CDIS, <https://data.imf.org/?sk=40313609-F037-48C1-84B1-E1F1CE54D6D5&slid=1482331048410>(검색일: 2022. 3. 7).

표 6-2.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현황

(단위: 개사)

산업	생산 법인	서비스 법인	판매 법인	해외 지사	연락 사무소	기타	계	대표 생산법인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0	0	0	1	3	롯데상사
식품 제조업	6	0	1	0	1	0	8	오리온, 팔도, CJ제일제당
음료 제조업	1	0	1	0	0	0	2	롯데제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0	0	0	0	1	0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	0	0	0	1	1	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0	0	1	0	2	0	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	0	1	0	0	0	2	
1차 금속 제조업	1	0	0	0	0	0	1	현대제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	0	0	0	0	0	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	0	0	0	4	1	7	삼성전자, LG전자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0	0	0	0	1	0	1	
기타 기계 및 장비	0	0	2	0	1	1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0	1	0	2	2	15	현대자동차
기타 제품 제조업	3	0	0	0	0	4	7	KT&G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1	0	0	0	0	1	
건설업	0	1	0	0	0	5	6	
도매 및 소매업	0	0	24	3	2	9	38	
운수 및 창고업	1	11	0	1	2	7	22	
숙박 및 음식점업	0	3	0	0	0	0	3	
정보통신업	0	3	0	0	0	1	4	
금융 및 보험업	0	3	0	0	3	2	8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동산업	0	0	0	0	0	1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5	0	1	0	2	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0	1	0	1	0	0	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1	0	0	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1	0	0	0	0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1	0	0	0	2	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0	3	0	1	2	5	11	
전 산업	29	33	31	8	22	44	167	

주: 생산법인에는 생산법인, 생산/판매 법인, 생산/판매/해외지사, 생산/서비스 법인, 생산/기타가, 서비스법인에는 서비스법인, 서비스/연락사무소가, 해외지사에는 해외지사, 해외지사/기타가 포함됨.

자료: KOTRA(2020),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2020년 기준 167개이며, 이는 전 세계 해외진출 기업 1만 391개의 1.6%에 해당함.

- 러시아에 진출한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2007년 칼루가), LG전자(2008년 모스크바), 현대자동차(20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이 있음.
- 러시아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총 29개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제조업 내 기업임.

2)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영향] 양국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교역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대러 수출] 2014년 이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대러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실물경제 타격 등으로 러시아는 수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됨.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에서 2015년 0.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기준 1.5% 수준임.
- 미국의 러시아 FDPR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FDPR 적용품목의 대러 직접수출 규모가 작아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FDPR 적용이 비교적 확실시되는 품목에는 반도체, 통신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FDPR 적용으로 인해 이들 품목의 대러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나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HS 854232),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HS 854231),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HS 852990)의 대세계 수출 중 대러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0.5% 미만으로⁷²⁾ 수출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대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에도 FDPR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대러 수출의 불확실성이 증가
 - 더불어 우리나라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관련 상품 수출의 비중이 높으므로, FDPR 적용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상품 가격 변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세계 수출] 또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러시아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아 수출제재 및 러시아 실물경제 악화가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러시아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 기준 0.57%,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에 이용된 한국 부가가치 비중은 0.28%로 낮은 수준임.
 - 다만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 연료(2.01%), 1차 금속 및 금속제품(0.94%) 등 한국의 수출 상위 산업에서 러시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2) 2021년 기준 품목별 전 세계 수출 대비 대러 수출 비중은 메모리 0.02%,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0.12%,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0.44%

표 6-3. 한국의 대세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2016년						2020년					
	총 수출	국내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러시아 부가가치	러시아 비중	순수 중복계산	총 수출	국내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러시아 부가가치	러시아 비중	순수 중복계산
음식료품 및 담배	6,682	5,084	1,509	25	0.38	88	9,568	7,491	1,978	37	0.39	99
섬유 및 섬유제품	18,957	13,969	3,117	53	0.28	1,872	8,867	6,217	1,509	24	0.27	1,141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	51,664	13,128	27,375	1,015	1.96	11,161	40,796	18,467	16,286	819	2.01	6,043
화학 및 화학제품	70,706	42,420	18,041	513	0.73	10,245	84,486	60,241	16,846	524	0.62	7,398
고무 및 플라스틱	8,601	5,923	1,776	37	0.43	902	13,723	10,017	2,320	48	0.35	1,386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47,421	29,277	11,301	308	0.65	6,842	54,986	33,995	12,959	517	0.94	8,033
기계	36,800	26,046	9,326	170	0.46	1,428	47,284	35,034	10,694	253	0.53	1,556
전기 및 광학기기	184,143	122,235	42,012	546	0.30	19,896	177,571	136,736	24,902	399	0.22	15,934
운송장비	114,927	79,546	32,240	560	0.49	3,141	70,616	46,027	21,110	417	0.59	3,479
소매업	14,769	13,096	1,222	25	0.17	451	1,315	1,161	123	3	0.21	31
해상운송	13,183	9,155	2,764	90	0.68	1,265	4,383	2,835	847	33	0.75	701
항공운송	8,868	6,096	2,135	62	0.70	637	9,281	6,048	2,712	94	1.01	522
임대 및 사업서비스	26,308	23,085	2,454	45	0.17	769	19,568	17,246	1,747	35	0.18	575
전 산업	643,588	422,553	160,603	3,561	0.55	60,432	601,615	429,842	122,695	3,430	0.57	49,078

주: 1) 35개 산업 중 총수출규모가 큰 10개 산업만 표로 나타냄.
 2) 국내부가가치에는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3) 러시아 비중은 한국의 총 수출에서 러시아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ADB WRIO(2016; 20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러 수입]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에는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대게 등 우리나라 대러 주요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3월 9일 러시아는 219개 품목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 수출 금지 품목의 대부분은 기계, 전자기기, 차량, 광학 및 의료 측정 검사기기로 이들 품목이 대러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우리나라 대러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대게 등은 제외
 - 더불어 281개 품목에 대해 EAEU 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러시아 현지진출 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현지 매출인바(약 94.6%), 현지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대세계 수입] 우리나라 전체 원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높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 수요견인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순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31.8%), 미국(12.5%), 쿠웨이트(10.8%), 러시아(6.4%)이며,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은 카타르(24.5%), 호주(22.6%), 미국(18.9%), 오만(8.9%), 말레이시아(6.9%), 러시아(6.7%)임.

■ [장기적 영향]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러시아 FDPR의 적용이 장기화되며 수출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GDP는 약 0.01~0.06%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FDPR 적용 품목들의 대러 수출이 금지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CCL 유형 번호 3~9에 속한 해외생산제품 전체에 대해 수출통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⁷³⁾ 미국의 러시아 FDPR 적용에 중국이 참여하는 상황과 불참하는 상황을 나누어 시나리오 설정
 - 러시아 FDPR 적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수출제재 참여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GDP는 약 0.01~0.06%p 감소하며, 러시아의 GDP는 약 1.66~6.19%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FDPR 적용가능 품목에 대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바, 중국의 참여여부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변동함.

표 6-4. 러시아 FDPR 제재 장기화의 경제적 영향

(단위: %p)

	한국	러시아	미국	EU	중국	일본
중국 불참	-0.01	-1.66	-0.01	-0.03	0.02	-0.01
중국 참여	-0.06	-6.19	-0.02	-0.08	-0.07	-0.06

자료: 저자 작성.

-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광범위한 금융제재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교역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CCL 유형 번호 3~9에 등재된 상품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상품인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전기제품 등 수출행정규제(EAR99) 상의 최종 소비재에도 FDPR이 적용될 경우 대러 수출이 급감할 수 있음.⁷⁴⁾
 - 미국과 EU 주도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 등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지역블록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SWIFT 배제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거래 절차의 증가와 거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금융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거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함.

4)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우리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 △투자 대상 △투자 목적을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대러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73) 러시아 FDPR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생산제품이 CCL 유형 번호 3~9에 속한 미국 원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었거나 △해외생산제품이 CCL 유형 번호 3~9에 속한 미국 원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부품, 구성품, 또는 장비에 의해 생산 또는 개발된 경우 수출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가정한 러시아 FDPR의 적용 범위는 실제보다 광범위함.

74) 2020~21년 중국의 화웨이社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점차 수출 제한 폭과 미소기준(de minimis rule) 강화 및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 등 규제 범위와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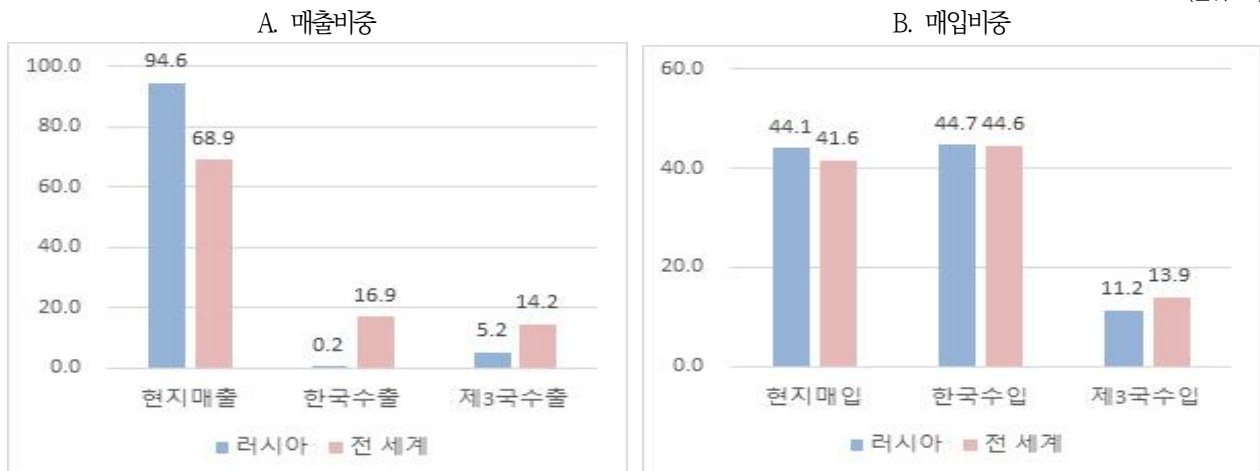
- 대러 투자가 고정비용이 높은 자동차(현대), 전자(삼성, LG 등), 식료품(롯데, 오리온, 팔도 등)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투자 철회 및 생산 중단 장기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통계가 집계된 1968년 이후 자동차, 전자, 식료품 산업에 대한 대러 직접투자는 전체 대러 제조업 직접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대러 직접투자 중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약 88.5%에 달함.

■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한 현지진출 기업의 생산 및 매출은 대러 제재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에 진출한 현지기업의 매입액 중 한국수입 및 제3국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7%와 11.2%로 높아 대러 제재로 러시아로의 수출이 금지될 경우 현지진출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6-10. 2020년 러시아 및 전 세계 한국 현지법인의 매출입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 「202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붙임 2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수출보다는 현지 내수 판매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러 제재 심화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법인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40% 정도 감소한 바 있음.
- 다만 러시아 진출기업의 연결매출액에서 러시아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현지기업의 매출감소가 기업의 연결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경제의 침체 정도에 따라 기업의 연결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표 6-5. 주요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삼성 전자	기업 연결매출액	216,688 (15.4)	187,579 (-13.4)	171,133 (-8.8)	167,150 (-2.3)	223,798 (33.9)	218,023 (-2.6)	198,999 (-8.7)	217,653 (9.4)
	러시아 법인 매출액	1,734 (-18.3)	956 (-44.9)	619 (-35.2)	786 (26.9)	939 (19.5)	868 (-7.6)	945 (8.9)	793 (-16.1)
	러시아 비중	0.80	0.51	0.36	0.47	0.42	0.40	0.47	0.36
LG 전자	기업 연결매출액	53,792 (4.5)	53,708 (-0.2)	48,195 (-10.3)	45,848 (-4.9)	57,353 (25.1)	54,862 (-4.3)	53,814 (-1.9)	58,145 (8.0)
	러시아 법인 매출액	2,828 (8.1)	1,736 (-38.6)	1,107 (-36.2)	1,359 (22.7)	1,323 (-2.6)	1,178 (-11.0)	1,312 (11.4)	1,289 (-1.8)
	러시아 비중	5.26	3.23	2.30	2.96	2.31	2.15	2.44	2.22
현대 자동차	기업 연결매출액	82,942 (5.6)	81,223 (-2.1)	78,165 (-3.8)	77,729 (-0.6)	89,630 (15.3)	86,163 (-3.9)	90,942 (5.5)	95,678 (5.2)
	러시아 법인 매출액	2,437 (-5.6)	1,518 (-37.7)	1,417 (-6.7)	1,928 (36.1)	2,624 (36.1)	2,438 (-7.1)	2,945 (20.8)	2,354 (-20.1)
	러시아 비중	2.94	1.87	1.81	2.48	2.93	2.83	3.24	2.46

주: 1) 기업별 러시아 내 생산법인: 삼성전자 LLC SAMSUNG ELECTRONICS RUS KALUGA, LG전자 LLC LG ELECTRONICS RUS,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2) 현대자동차의 연결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3) () 안은 전년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Orbis, <https://orbis.bvdinfo.com/version-2022224/orbis/1/Companies/Search>(검색일: 2022. 3. 10)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main.do>(검색일: 2022. 3. 10) 내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히 러시아 생산법인 중 다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로 해당 산업에서 현지진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법인이 8개 진출해 있음. KIEP

【연구진】

러시아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044-414-1255)
	정민현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044-414-1128)
	강부균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044-414-1242)
	민지영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044-414-1095)
대러 제재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 (whyeon@kiep.go.kr, 044-414-1022)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044-414-1361)
미국	강구상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권혁주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박은빈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유럽	조동희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이현진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윤형준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중국	이승신	중국경제실장 (sslee@kiep.go.kr, 044-414-1235)
	최원석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현상백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044-414-1284)
	허재철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정지현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일본	김규판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keiokim@kiep.go.kr, 044-414-1017)
거시금융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mshan@kiep.go.kr, 044-414-1153)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syoon@kiep.go.kr, 044-414-1151)
	백예인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yibaek@kiep.go.kr, 044-414-1132)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hyosangkim@kiep.go.kr, 044-414-1065)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ysjeong@kiep.go.kr, 044-414-1141)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anwontae@kiep.go.kr, 044-414-1358)
	김유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yrkim@kiep.go.kr, 044-414-1326)
교역투자	배찬권	무역통상실장 (ckbae@kiep.go.kr, 044-414-1208)
	김현수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044-414-1087)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hhkim@kiep.go.kr, 044-414-1135)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044-414-1205)